주간통일정세 2009-27(2009.06.29~07.05) 발행 통일연구원 발행인 통일연구원장
주소 서울시 강북구 4·19길 275 통일연구원 (우) 142-728
전화 02) 900-4300 전송 02) 901-2547
E-mail webmaster@kinu.or.kr http://www.kinu.or.kr

주간 통일정세

2009-27

Contents

>> Ⅰ. **북한동향** 1. 대내정세 2. 대외정세 3. 대남정세
>> Ⅱ. **동북아정세** 1. 대북한 관련 2. 주변국 관련

주간통일정세는 북한 및 국내외 언론보도를 참조하여 작성된 것임.

Ⅰ. 북한동향

1. 대내정세

가. 정치 관련

北강남호, 서해 공해상서 북상 중(7/5, 연합)

- 미얀마로 추정되는 목적지로 항해하다가 갑자기 항로를 변경한 북한 선박 강남1호가 5일 현재 서해 공해상에서 북상 중인 것으로 알려짐. 정부의 한 소식통은 "강남1호가 전남 영광 앞바다에 있는 안마군도에서 서쪽으로 200여km 떨어진 서해 공해상에서 북상 중인 것으로 안다"며 "6일 오전 10시께 북한 쪽으로 진입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밝힘.

민주조선, 보복타격 전투동원 태세 유지(6/30, 민주조선; 7/3, 우리민족끼리)

- 민주조선은 6월 30일자 '월간 국제정세 개관 -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파괴하는 역사의 반동들'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북한 군대와 주민은 미국의 "반공화국 군사적 압살정책을 높은 각성을 갖고 주시"하면서 미국이 북한의 "자주권과 안전을 조금이라도 침해한다면 즉시에 맵짠 보복타격을 가할 만단의 전투동원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주장
- 신문은 "조선반도에서 긴장상태를 완화하고 평화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미국의 대조선 적대시 정책 포기가 필수적 요구로 제기된다"며 "미국이 진정으로 조선반도 정세 완화와 평화보장에 관심이 있다면 시대착오적인 대조선 적대시 정책을 당장 걷어치워야 한다"고 요구

민주조선, 美와 공개적 핵대결 불가피(6/30, 민주조선; 연합)

- 민주조선은 최근 한미 정상회담에서 이뤄진 미국의 대한 확장억지력 제공 명문화를 비난하며 "엄중한 사태 하에서 우리가 갈 길도 명백해지게 되었다"며 "이제는 우리도 미국과 공개적으로 핵대결을 하지 않으면 안되게 되었다"고 30일 주장
- 신문은 '핵우산 제공은 노골적인 북침 핵전쟁 공약이다'라는 제목의 개인필명 논평에서 확장억지력 제공 명문화는 본질적으로 "미국이 우리 공화국(북한)을 반대하여 핵전쟁도 불사하겠다는 것을 세계 앞에 공공연히 선포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전했음.

나. 경제 관련

美, 대북 추가 식량지원계획 없어(7/1, 미 국무부)

- 미국 국무부는 1일 북한에 대한 식량지원과 관련, 누구에게 전달되는지를 확인할 수 없으면 추가로 식량을 지원할 수 없다고 밝힘. 켈리 국무부 대변인은 "우리는 현재 북한에 추가로 식량을 지원할 계획이 없다"면서 "추가 식량지원은 식량지원이 적절하게 활용된다는 보장이 있어야만 할 것"이라고 설명
- 켈리 대변인은 "우리는 여전히 북한 주민들의 생활상에 대해 매우 걱정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우리는 (식량지원에 대한) 모니터링과 접근 등 적절한 관리프로그램이 필요한 데 현재 그것이 없다는 점을 매우 우려한다"고 설명하고 북한이 지난 3월 미국의 식량지원을 거부했다고 상기시키면서 북한에서 식량지원 활동을 관장해온 비정부기구(NGO) 모니터링 요원들을 추방한 사실을 언급
- 하지만 켈리 대변인은 북한이 핵문제로 외부세계와 대치하는 바람에 원조가 줄어 북한 주민 특히 어린이들이 심각한 식량난에 직면하고 있다는 유엔 세계식량계획(WFP)의 지적에 대해서는 우려를 표시

WFP, 北 식량지원 계획대비 ⅓로 감축(7/1, WFP)

- 핵실험 등 여파로 북한에 대한 세계식량계획(WFP)의 식량 지원 규모를 기존 계획대비 3분의 1수준으로 줄였다고 WFP가 1일 밝힘. 토빈 듀 WFP 평양사무소장은 이날 베이징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당초 목표한 620만 명의 1/3에 불과한 200만 명의 북한 주민에게 식량을 공급할 계획이라면서 이는 국제사회가 1990년대 중반부터 대북 식량 지원을 시작한 이후 가장 작은 규모라고 설명

北광고회사, 올해 국제시장 적극 개척(7월호, 조국)

- 북한에서 각종 상품 및 회사 광고를 전담하는 조선광고회사가 올해 국제시장 개척에 적극 나설 계획이라고 월간 '조국' 7월호가 보도
- 1일 입수된 잡지는 '조선 무역의 오늘'이라는 특집기사에서 지난 2006년 2월 설립된 이 회사가 북한의 "기관, 기업소, 회사들과 경쟁력 있는 상품들에 대한 광고활동을 세계적 판도에서 대대적으로 진행하기 위한 본격적인 준비사업에 들어갔다"고 전언

北, 불법 무기수출 러시아 육로 활용(6/30, 연합)

- 미국이 무기 선적 의혹이 있는 북한 선박 강남호를 추적하고 있는 가운데, 북한은 자국의 무기 수출을 통제하기 위한 대량살상무기확산방지구상(PSI)을 회피하기 위해 중국·러시아 육로로 우회해 수출하는 등 다양한 불법·편법 무기 수출을 해온 것으로 밝혀짐.
- 북한은 지난 2000년 이후 지난해까지 이같은 방법으로 이란·시리

아·미얀마 등에 미사일·잠수정·다연장로켓(방사포)·야포 등 약 8억 달러의 무기를 수출한 것으로 알려짐.

세계가톨릭원조기구, 대북 인도지원 계속(6/30, 연합)

- 가톨릭교회의 공식 원조기구로 세계 1백64개 회원기구들이 참여한 '카리타스 인터내셔널'은 최근 연례 대북지원 특별소위원회를 열어 북한의 제2차 핵실험에 따른 대북 제재 국면에서도 한국 카리타스를 통한 대북 인도주의 지원 사업을 계속해나가기로 의견을 모음.
- 한국 카리타스의 이승정 대북협력팀장은 지난 14, 15일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회의에서 "카리타스 인터내셔널은 대북 지원사업의 의지를 거듭 확인하는 의미에서, 한국 카리타스에 대한 대북 사업 위임 시한을 무기 연장키로 했다"고 설명
- 카리타스 인터내셔널은 90년대 초까지는 긴급구호 차원의 식량과 의료 지원에 치중해왔으나 최근엔 인도주의적 개발지원으로 방향을 바꿨음.

다. 군사 관련

北 스커드, 노동미사일 명중률 향상(7/5, 연합)

- 북한이 4일 발사한 7발의 미사일 가운데 5발가량이 발사대로부터 450여km의 같은 지점에 낙하, 명중률이 향상된 것으로 분석되었음. 정부의 한 소식통은 5일 "북한이 전날 발사한 7발의 미사일 중 5발가량이 동해 항해금지구역내 같은 지점에 떨어진 것으로 파악됐다"면서 "그만큼 목표물에 대한 명중률이 높아진 것으로 분석된다"고 밝힘.
- 정보당국은 북한이 스커드 미사일 200~300기, 사거리 1천300km에 이르는 노동미사일 200여기를 각각 실전 배치한 것으로 추정, 북한은 연간 100발의 스커드를 생산가능
- 북한은 7월 4일 오전과 오후 강원도 안변군 깃대령에서 스커드와 노동미사일로 추정되는 미사일을 모두 7발을 발사

북, 100km 단거리 미사일 4발 발사(7/3, 연합)

- 북한이 2일 오후 동해상으로 지대함 단거리 미사일 4발을 발사, 군 관계자는 이날 "북한이 오후 5시20분과 6시, 7시50분, 9시20분께 함경남도 함흥시이남 동해안 신상리 기지에서 지대함 단거리 미사일을 각각 1발씩 발사했다"면서 "발사된 미사일은 모두 4발"이라고 밝힘
- 북한이 지난 5월29일 이후 34일 만에 발사한 단거리 미사일 4발은 모두 100km가량을 비행한 것으로 분석되었음. 군 관계자는 "북한이 야간에 집중적으로 미사일을 발사한 것으로 미뤄 군사훈련 목적으로 추정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대외적 무력시위 차원에서 단거리 미사일을 발사할 가능성도 있다고 판단, 북한의 군사동향을 면밀

히 주시하고 있다"고 전언

-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은 최대사거리 120~160km의 KN-01 지대함 미사일로, 길이는 5.8m, 직경은 76cm이다. 이 미사일은 사거리 83~95km의 실크웜(CSS-C-2) 미사일을 개량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음.
- 군 관계자는 "실크웜의 전자회로를 개선해 발사준비 시간을 단축한 KN-01 미사일이 함정에 배치되면 비교적 사거리가 길어서 우리 해군에 위협이 될 것"이라고 설명

라. 사회·문화 관련

○ 北, 150일전투속 새벽출근에 야간작업(7/4, 조선신보)

- 조선신보는 지난 4일 '150일 전투의 나날에-4-, 야간작업 몸에 배인 여성 노동자들의 합심'이라는 제목의 평양발 기사에서 지난 4월 20일부터 북한에서 '150일 전투'가 시작된 이후 평양 삼석구역에 있는 삼석옷공장의 여성 노동자들이 새벽 6시에 출근해 일을 시작하는 등 분주한 나날을 보내고 있다고 소개
- 이 공장의 여성 노동자들이 종전에는 아침 8시에 출근했지만 "지금은 6시에, 모여야 할 사람이 다 모인다"며 '150일 전투'가 시작된 이후 "작업량이 대폭 불어났지만, 하루 목표를 달성하기 전에는 현장을 떠나지 않는 기풍 속에 노동자들이 일하고 있다"고 밝혀 노력동원이 극대화되고 있음을 시사
- 치마저고리를 비롯한 여성복과 아동복, 학생복을 생산하는 이 공장의 특성상 종업원은 대부분이 여성들인데 이들은 공장에서 1~2㎞ 안팎의 지역에 살고 있지만 '150일 전투'가 시작된 이후에는 "지척에 있는 자기 집에서 가족과 단란한 시간을 보내는 일이 거의 없다"고 신문은 보도, 또 "150일 전투 기간 공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식사는 가족들이 보내는 곽밥(도시락)"이라며 "저녁에는 남편이 심부름을 하게 되는 가정도 많다"고 신문은 밝힘.
- 신문은 이 공장의 "현재 월간 증산실적은 연초에 세운 계획의 170% 수준"이라며 "150일 전투가 끝나게 될 9월 중순까지 연간 생산목표를 달성하게 될 전망"이라고 설명

○ 안변군 집단체조 공연(7/4, 조선중앙TV)

- 강원도 안변군에서 김일성 주석 현지지도 50주년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현지지도 10주년을 맞아 5천명 군내 학생들이 참가하는 집단체조 '장군님과 안변'을 공연했다고 조선중앙TV가 보도

○ 北축구대표 리명국, 대 이은 골키퍼(7/3, 조선신보)

- "남아공 월드컵축구 아시아지역 최종예선 마지막 경기에서 사우디아라비아의 총공세를 '신들린 듯' 막아내며 북한 대표팀을 본선으로

이끈 골키퍼 리명국은 아버지도 축구 골키퍼 출신"이라고 조선신보가 3일 보도, 신문은 리명국이 "체육인 가정에서 태어났다"며 "아버지는 축구선수 문지기(골키퍼)였고 어머니는 배구선수였다"고 소개

○ **北, 월드컵본선 진출도 장군님 덕분(7/3, 연합)**

- 북한 축구 관계자들은 북한 축구대표팀의 월드컵 본선 진출이 "장군님 전법" 덕분이라며 김정일 국방위원장에 대한 찬양 소재로 활용, 특히 북한 축구협회 김정수 서기장은 조선신보와 인터뷰에서 김정일 위원장이 지난해 고 김일성 주석의 생일인 4월15일 "경기장에서 직접적인 지도"를 했다고 소개

2. 대외정세

가. 안보리 제재관련

○ **美, 北핵확산 관련기업 자산동결(6/30, 연합)**

- 미국은 30일 북한의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에 연계되거나 이를 지원한 혐의를 받고 있는 북한의 무역회사와 이란 소재 한 기업에 대해 자산동결 및 거래금지 등의 제재조치를 취했음.
- 미 국무부는 이날 우라늄농축 장비구입에 관여해온 북한 무역회사 남촌강(NCG)이 보유한 미국내 자산에 대해 동결조치를 취하고 미국 기업 및 개인들과의 거래를 금지한다고 밝힘.

나. 북·미 관계

○ **美, 말레이시아 北계좌 확인·추적중(7/4, 연합)**

- 미국은 말레이시아에서 북한의 의심스러운 계좌 수 개를 발견해 동결 등 봉쇄 조치를 추진중인 것으로 4일 전해짐. 워싱턴의 핵심 소식통은 "말레이시아에 북한의 수상한 계좌가 몇 개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면서 "오바마 행정부가 이에 대한 봉쇄에 나섰다"고 전언
- 필립 골드버그 조정관이 이끌고 있는 미국의 대북제재전담반이 중국에 이어 말레이시아를 찾은 것도 이 때문으로, 골드버그 조정관 일행은 5일 말레이시아 관련 당국자와 만나 북한 계좌 봉쇄 문제를 협의할 것으로 전해짐. 앞서 오바마 대통령은 6월 26일 나지브 라자크 말레이시아 총리와 전화 통화를 갖고 북한 문제를 논의하기도 했었음.

○ **美국무부, 北 긴장고조 행위해선 안돼(7/4, 미국무부)**

- 미국 국무부는 4일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관련,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 행위라면서 긴장을 고조하는 행위를 해선 안 된다고 밝힘. 국무부 관계자는 "북한의 이런 행위는 도움이 안된다"면서 "북한은

긴장을 고조하는 행위를 자제하고 비핵화 회담과 2005년 9.19 공동성명 합의 사항을 준수하는데 관심을 쏟아야 할 것"이라고 언급

美안보보좌관, 北도발에 맞춤대응 시사(7/3, 연합)

- 제임스 존스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3일 미국 독립기념일(7월4일)을 전후해 북한이 도발에 나선다면 도발 행태와 수위를 보고 맞춤 대응에 나설 것임을 시사, 존스 보좌관은 이날 '매클래치' 신문과 가진 인터뷰에서 "우리는 동원가능한 몇가지 대응 옵션을 갖고 있다"면서 "우리의 대응은, 북한이 앞으로 수일간·수주간에 걸쳐 보여줄 행동이 무엇이냐에 따라 달라질 것"이라고 답변

오바마, 대북 추가제재 가능성 시사(7/2, AP통신; 연합)

-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2일 북한의 핵실험에 따른 제재가 추가로 있을 수 있다면서 북한이 경제문제를 해결하고 국제사회에 편입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핵을 포기하는 것이라고 언급
- 오바마 대통령은 내주 이탈리아, 가나 러시아 해외순방에 앞서 이날 백악관에서 AP통신과 가진 기자회견에서 북한의 지난 5월 핵실험과 관련해 규제가 더 있을 수 있을 수 있다고 밝히면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는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
- 오바마 대통령은 이와 함께 미국은 대북제재를 추진하고 있지만, 북한이 핵협상 테이블로 복귀하도록 "문은 열어놓을 것"이라고 강조
- 이와 관련, 로버트 기브스 백악관 대변인은 "대북 제재는 분명히 충격이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미 행정부는 활발한 제재를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또 북한이 외부로 무기나 핵관련 물질을 수출하지 못하게 하기 위한 활발한 검색이 최우선적인 관심사라면서 오바마 대통령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들과 함께 북한이 수년 전에 약속한 의무사항을 이행하도록 하기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답변

美북부사령관, 北미사일, 美 향할 땐 격추(7/2, 워싱턴타임스)

- 빅터 레뉴어트 미 북부사령관은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이 발사돼 미국 영토를 위협한다고 감지될 경우 미군은 이를 요격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힘. 북미 항공우주방어사령부(NORAD) 사령관을 겸직하고 있는 레뉴어트 북부사령부 사령관은 2일 발간된 워싱턴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미국은 매우 믿을만한 탄도미사일 방어 능력을 갖추고 있다"면서 이같이 언급

北 7만명, 해외서 강제 노동(7/2, 연합)

- 미국 국무부의 루이스 시드바카(CdeBaca) 인신매매퇴치담당 대사는 1일 서울의 주한 미국대사관에서 열린 화상 기자회견에서, "중국의 탈북 노동자들이 착취되는 것과 북한 내 강제수용소도 우려스럽

지만 다른 형태의 강제노동도 있다"며 "북한 정부가 동남아시아·동유럽·중동 국가들과 노동 계약을 맺고 주민을 외국으로 이주시켜 강제로 노동을 시키고 있다"고 언급

- 그는 "유럽 국가들은 노예로 전락한 북한 노동자들을 이제는 받지 않고 있다"며, 2007년부터 북한과의 노동 계약을 맺지 않은 체코를 그 예로 듦. 시드바카 대사는 "몽골·태국·라오스 등 북한과 노동 계약이 체결된 국가들에도 이런 사실을 알려 북한 노동자들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도록 외교적으로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
- 미 국무부는 6월 16일 발표한 '2009 인신매매보고서'에서 북한 당국이 외국으로 보내 노동력을 착취하는 주민의 수가 최대 7만명에 달한다고 추산, 2008년 보고서가 추정한 1만5000여명보다 4배 이상 늘어났음. 2009 보고서는 북한 정부가 해외 노동 인력의 자유를 제약하고, 이들이 불만을 외부에 노출할 경우 보복하겠다고 위협한다고 비판하고 또 이들이 해외에서 번 돈은 '자발적 기부'라며, 북한 당국이 가로챈다고 밝힘. 이 보고서에서 북한은 이란·말레이시아·사우디아라비아·수단 등과 함께 최하위인 3등급으로 분류

다. 북·중 관계

○ 中, 北미사일 관련국들에 냉정 유지 촉구(7/5, 연합)

- 중국이 5일 북한 핵문제 관련국들에 대해 냉정과 자제를 유지해줄 것을 촉구, 친강(秦剛)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홈페이지에 올린 성명을 통해 "중국은 관련 상황을 주의 깊게 보고 있다"면서 "관련국들은 지역 평화와 안정 유지에 함께 노력하기를 바란다"고 언급

○ 中, 北미사일 발사에 불만 간접 표시(7/5, 연합)

- 중국은 북한이 2일에 이어 4일 동해상에서 다시 미사일 7기를 발사한 데 대해 간접적으로 불만을 표시, 러시아를 방문 중인 우다웨이(武大偉) 중국 외교부 부부장은 알렉세이 보로다브킨 러시아 외무차관과의 회담에서 각 당사국은 냉정함을 되찾고 동북아 지역의 안정을 해칠 수 있는 어떤 조치도 자제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고 중국 언론매체들이 5일 보도

라. 북·일 관계

○ 日, 北미사일 발사 안보리서 제기 방침(7/5, 연합)

- 일본 정부는 북한이 잇달아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는 등 도발을 계속함에 따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북한에 대한 제재 결의의 완전한 이행을 촉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짐. 이와 함께 북한이 일본을 사거리에 둔 중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할 가능성도 있을 것으로 보고 정보수집 태세를 한층 강화하면서 발사 징후가 있으면 미사일방어(MD)

시스템에 의한 요격을 검토하고 있다고 일본 언론들이 5일 보도

- 일본 정부는 4일 오전 북한의 미사일 발사 직후 총리실에 관계 성·청 간부들로 구성된 대책실을 설치하고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주변국의 안보를 위협하고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는 도발행위라고 강력히 비난하는 성명을 발표

3. 대남정세

○ 北, 임대료 해결돼야 南기업 애로 해소(7/2, 조선중앙방송)

- 북한은 2일 열린 제3차 개성공단 실무회담에서 토지임대료 문제가 해결되면 남한 기업들의 경영상 애로를 풀어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고 조선중앙방송이 보도
- 조선중앙방송은 북측이 요구한 토지임대료가 5억달러라는 데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은 채 회담에서 북측이 "토지임대료 문제가 해결되는 차제로 남측 기업들의 경영상 애로조건들을 풀어줄 용의를 다시금 표시했다"며 "성의에는 성의로, 아량에는 아량으로 화답할데 대해 강조했다"고 밝힘.
- 방송은 북측이 토지임대료 문제와 관련해 "우리(북측)안의 취지와 타당성에 대해 상세히 언급했다"며 "우리가 제시한 토지임대료의 기준이 남조선과 다른 나라 특구의 보편적 실례로 보나, 개성공업지구의 특수성과 가치 그리고 그 전망으로 보나 결코 높은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고 전했으나 북측이 제시한 구체적인 논리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음.
- 방송은 남측의 입장과 관련, "개성공업지구 계약 개정과는 관계없는 문제들을 장황하게 늘어놓으면서 기본문제 토의를 회피했을 뿐 아니라 얼토당토않은 궤변에 매달리면서 우리의 정당한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생떼를 썼다"며 "심지어 개성공업지구에서 지금까지 특혜를 받은 것이 없다는 망발도 서슴지 않았다"고 주장

○ 김영탁 대표, 남,북 입장차 오후 회담못해 유감(7/2, 연합)

- 김영탁 통일부 남북회담본부 상근회담 대표 등 우리 대표단이 북측과의 3차 회담을 마치고 2일 오후 5시15분께 경의선 남북출입사무소로 돌아옴. 김 대표는 도착 직후 기자들에게 "억류 근로자 문제 해결을 강하게 제기했고 개성공단 관련 현안을 하나하나 풀어가는 실질 회담을 하자고 했다"며 "그러나 북측은 종래의 입장만 되풀이해 의견차가 좁혀지지 않았다"고 설명

북한연구센터 제공

Ⅱ. 동북아정세

1. 대북한 관련

가. 북핵 문제 및 6자회담, 北미사일 발사

○ "北강남호, 서해 공해상서 북상 중"(7/5)

- 미얀마로 추정되는 목적지로 항해하다가 갑자기 항로를 변경한 북한 선박 강남1호가 5일 현재 서해 공해상에서 북상 중인 것으로 알려졌음.
- 정부의 한 소식통은 이날 "강남1호가 전남 영암 앞바다에 있는 안마군도에서 서쪽으로 200여km 떨어진 서해 공해상에서 북상 중인 것으로 안다"며 "6일 오전 10시께면 북한 쪽으로 진입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밝혔음.
- 시속 16~18km의 속력으로 항해 중인 강남1호는 우리 군의 작전인가구역에서 20여km 떨어진 공해상으로 항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음.
- 정부는 강남1호가 자칫 항로를 이탈해 군의 작전인가구역 내로 진입할 것에 대비해 예의 주시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음.
- 불법무기를 실은 것으로 의심되는 북한 선박 강남1호는 미얀마로 추정되는 목적지를 향해 보름 가까이 항해하다가 지난달 말 항로를 변경해 북한으로 되돌아가고 있음.
- 이날 한국을 찾는 개리 러프헤드 미국 해군총장은 앞서 4일 일본에서 기자들을 만나 북한 선박 강남1호가 갑자기 항로를 변경한 것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 결의안 덕분이라며 "유엔 안보리 결의안이 부여한 영향력과 지원은 강남1호를 곤란하게 만들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음.

○ 濠외무 "北미사일 발사능력 개선 우려"(7/5)

- 스티븐 스미스 호주 외교통상부장관은 5일 북한의 잇단 미사일 발사와 관련, "가장 우려스러운 일은 북한이 과연 어떻게 미사일 발사 능력을 개선했을까 하는 것"이라고 밝혔음. 스미스 장관은 이날 나인네트워크방송에 출연, "유감스럽게도 북한은 미사일 발사 능력을 진전시켰다"며 "지금으로서는 북한이 미사일의 사거리를 얼마나 확대했는지보다는 미사일 발사능력을 어떻게 개선했는지가 가장 걱정된다"고 말했음.
- 그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한반도를 비롯, 북아시아, 일본에 직접적인 위협을 가하고 있기는 하지만 추후 발사능력 개선에 따라 위협범위가 더 확대될 수 있다"고 우려했음. 스미스 장관은 "북한은

어려운 상대"라며 "단기간 해결책은 없지만 국제사회가 통일된 목소리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 결의안을 지지하는 게 절실하다"고 말했음.

한·일 6자수석, 내일 서울서 회동(7/5)

- 한국과 일본의 북핵 6자회담 수석대표인 위성락 외교통상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사이키 아키타카(齊木昭隆) 외무성 아시아대양주 국장이 6일 서울에서 회동한다고 외교통상부가 5일 밝혔음. 위 본부장과 사이키 국장은 6일 낮 서울 시내 모처에서 오찬 회동하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1874호의 이행 및 6자회담 재개 방안, 잇따른 미사일 발사 등 최근 북한의 도발에 대해 평가할 예정임.
- 또 러시아·미국·일본·한국 등 북한을 제외한 6자회담 4개 참가국 순방에 나선 의장국 중국의 우다웨이(武大偉) 외교부 부부장과 협의에 앞서 양국의 입장을 조율하고 공조 방안을 모색할 것으로 전해졌음.
- 외교부 당국자는 "이번 한·일 6자 수석대표 회동은 북한의 2차 핵실험과 안보리 결의 1874호 채택 이후 현재 상황에 대한 점검 차원에서 이뤄지는 것"이라며 "우다웨이 부부장과 각국 대표간 회동에 앞서 한·일 양국의 입장을 조율하는 의미도 있다"고 말했음.
- 위 본부장은 이어 오는 12~14일 방한하는 6자회담 의장 우다웨이(武大偉) 부부장과도 만나 북핵 문제와 동북아시아 및 한반도 정세에 대한 심도 있는 의견을 교환할 예정임. 사이키 국장은 6일 오전 입국, 위 본부장과 회동하고서 오후에 바로 출국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음.

北 단·중거리미사일, 南전략시설 위협(7/5)

- 북한이 지난 2일과 4일 각각 발사한 KN-01 단거리 미사일과 스커드계열, 노동미사일은 남한의 군 시설과 주요 국가전략시설을 타격권에 두고 있음. 북한이 KN계열의 단거리를 개발하고 스커드급 미사일의 성능개량에 집중하고 있는 것은 유사시 해군과 공군기지를 비롯한 주요 전략시설의 기능을 무력화하기 위한 것으로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음.
- 여기에다 사거리 1천300km의 노동미사일은 일본을 타격권에 두고 있지만 사거리를 줄이면 남한 전역뿐 아니라 유사시 한반도로 전개되는 미군 증원전력에도 타격을 가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음.
- **◇스커드·노동미사일** = 1976년 이집트로부터 소련제 스커드-B와 발사대를 도입해 이를 역설계하는 방식으로 1981년 개발에 성공했음. 1984년 4월 스커드-B를 최초 시험발사한 데 이어 1986년 5월 스커드-C의 시험발사에도 성공했음. 스커드-B는 사거리가 300km지만 이를 개량한 스커드-C는 탄두 중량을 985kg에서 500kg으로

줄여 사거리가 500km로 늘어났음. 스커드-B/C는 1988년 실전 배치됐음.

- 1991년 6월에는 사거리를 600km로 늘린 스커드-C 개량형을 시험발사하기도 했음.
- 북한이 스커드 미사일을 정확히 몇 발을 배치했는지는 북한 스스로 공개하지 않아 알 수 없지만 연간 100발가량의 생산능력으로 미뤄 200~300발이 배치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음. 하지만 500~600발로 추정하는 전문가들도 있음.
- 북한은 1985년 최초의 지대지 미사일부대를 창설했고 1988년 4군단 예하에 스커드-B 연대를 편성했음. 여단 규모의 스커드 미사일부대는 비무장지대(DMZ)에서 북쪽 50여km 지점에 여러 곳 배치돼 있음.
- 스커드와 같은 지대지 미사일은 발사징후를 조기에 탐지하기 어렵고 비행시간이 짧아 요격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설명임. 스커드 미사일은 발사 4~6분이면 수도권에 도달함.
- 우리 군은 스커드 미사일 위협에 대응해 패트리엇(PAC-2) 요격미사일을 도입하고 있으며 탐지거리 1천km의 탄도탄 조기경보레이더를 내년에 확보한다는 계획임.
- 또 북한은 스커드 미사일의 생산 경험을 바탕으로 유사시 미국과 일본을 견제할 목적으로 노동미사일 개발에 나섰음.
- 1990년 5월 노동 1호 미사일을 최초 시험발사한 데 이어 1993년 5월 실전배치를 위한 최종 발사시험을 했음. 일부 엔진성능에 결함이 발견돼 이를 보완한 뒤 1998년 실전 배치했음. 차량에 탑재된 이동식 발사대를 이용하는 노동미사일은 탄두 중량이 700kg으로 고성능 폭약과 화학탄, 핵탄두도 탑재할 수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 다만 1천km 비행시 원형공산오차(CEP)가 2km 이상이어서 명중률이 높지 않다는 분석임. 그러나 북한은 4일 노동미사일의 사거리를 줄여 항해금지구역내 의도한 지점에 정확히 발사해 명중률을 높인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음.
- **◇KN계열 단거리 미사일** = KN-01 미사일은 중국제 실크웜(사거리 83~95km.CSS-C-2) 지대함 미사일을 개량한 것으로 1990년대 말 이후 본격 개발됐음. 길이는 5.8m, 직경은 76cm, 무게는 2.3t에 이름.
- 최대사거리 120~160km의 KN-01 지대함 미사일은 유사시 한·미 양국군 상륙부대와 미 항모 전단이 북한 해안에서 상륙작전을 펴는 상황을 염두에 둬 개발된 것으로 분석되고 있음. 그러나 서해 북방한계선(NLL) 인근 해상의 함정에 배치할 경우 평택기지도 타격권에 둘 수가 있음. 북한은 지난 2일 함경남도 함흥시 이남 동해안 신상리 기지에서 KN-01 미사일 4발을 동해상으로 발사했음.
- 이어 신형 지대지 KN-02 미사일도 실전 배치되고 있음. 2004년 1발, 2005년 5발, 2006년과 2007년 각각 3발 등 12발을 시험 발사

했음. 2007년 4월 인민군 창건 기념일 군사행진에 이 미사일이 공개됐음.

- KN-02 미사일은 옛 소련의 이동식 단거리 지대지 미사일 SS-21을 개량한 것으로 고체연료를 사용, 5분내 신속 발사가 가능함. 원형공산오차는 100m 내외이며 이동식 발사대에서 신속히 발사할 수 있어 우리 군에 위협이 되고 있음.
- 버웰 벨 전 주한미군사령관은 2007년 7월 관훈클럽 초청연설을 통해 KN-02 미사일과 관련, "이 첨단 단거리 미사일이 한반도를 겨냥하고 있으며 고체미사일로 현대화됐고 신속한 발사와 이동이 쉽다"고 평가했음.

"北 스커드·노동미사일 명중률 향상"(7/5)

- 북한이 4일 발사한 7발의 미사일 가운데 5발가량이 발사대로부터 450여km의 같은 지점에 낙하, 명중률이 향상된 것으로 분석됐음. 정부의 한 소식통은 5일 "북한이 전날 발사한 7발의 미사일 중 5발 가량이 동해 항해금지구역내 같은 지점에 떨어진 것으로 파악됐다"면서 "그만큼 목표물에 대한 명중률이 높아진 것으로 분석된다"고 밝혔음.
- 소식통은 "발사대로부터 450여km의 같은 지점에 낙하한 미사일은 스커드 개량형과 노동미사일이 섞여 있다"면서 "미사일의 정확한 기종과 성능을 분석하는 데는 수일이 소요될 것"이라고 말했음. 그는 "7발 가운데 3발은 비행속도가 유난히 빨라 사거리를 줄여 발사한 노동미사일로 추정하고 있다"고 설명했음. 그간 북한은 상대적으로 원형공산오차(CEP)가 큰 스커드와 노동미사일의 명중률 향상을 위해 성능개선 시험을 지속적으로 진행해왔음.
- CEP는 목표지점과 탄착지점간 거리차를 말하는 것으로, 탄도미사일이 1km의 CEP를 갖는다면 통상 목표물을 정확히 타격할 수 없는 것으로 간주함. 현재 실전 배치된 노동 미사일은 1천㎞ 비행시 탄착지점이 목표지점으로부터 2km~4km, 스커드 미사일은 300㎞ 비행시 450m~1km를 각각 벗어나는 등 CEP가 큰 것으로 알려지고 있음.
- 북한은 스커드 미사일 200~300기, 사거리 1천300km에 이르는 노동미사일 200여기를 각각 실전 배치한 것으로 정보당국은 추정하고 있음. 북한은 연간 100발의 스커드를 생산할 수 있음.

北 잇단 미사일 발사..비용 얼마나 될까(7/4)

- 북한이 4일 7발의 스커드급 미사일을 동해 상으로 발사함으로써 올해 들어서만 벌써 17발의 단거리 미사일을 쏘아 올렸음. 북한은 제2차 핵실험 당일인 지난 5월25일 사거리 130㎞의 단거리 지대함·지대공 미사일을 각 1발씩 쏜 데 이어 다음날인 26일 지대함 미사일 3발을 발사했음. 같은 달 29일엔 최대사거리 260㎞짜리 신형 지대공 미사

일 1발을 발사했고 지난 2일에는 지대함인 KN-01 단거리 미사일 4발을 100㎞가량 날려보냈음. 지난 4월5일 발사한 장거리 로켓까지 합하면 18발을 쏜 것임.

- 미사일 가격이 각종 첨단기술과 부품 사용 여부, 개발비용 등에 따라 결정되고 북한의 노동력과 관련 비용의 기준이 다른 나라와 달라 정확한 가격 산정은 어렵지만 이날 발사한 것으로 보이는 스커드-C 미사일과 노동미사일의 기당 가격은 각각 400만 달러, 1천만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평가됨. 7발 중 노동미사일이 1~3발, 스커드-C 미사일이 4~6발인 것으로 알려진 점을 감안하면 북한이 이날 발사한 미사일 가격은 총 3천400만~4천600만 달러에 이르는 셈임.
- 북한이 올해 들어 지난 2일까지 발사한 미사일 10기의 가격까지 합하면 그 금액은 엄청나게 불어남. KN-01을 포함한 지대함 미사일 8발, 최대 사정 260㎞의 신형을 포함한 지대공 미사일 2발의 가격은 알려지지 않고 있음. 다만 단순히 이들 10기의 미사일이 스커드급 미사일에 비해 사거리가 짧다는 점을 고려해 가격을 낮게 산정하더라도 최소 1천만 달러는 넘을 것으로 추정됨.
- 여기에 북한은 지난 4월5일 발사한 장거리 로켓 '은하2호'와 여기에 탑재했다고 주장한 위성 '광명성2호'의 개발비로 최소 2천억원에서 최대 5천500억원을 투입한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음. 결국 북한이 장거리 로켓을 포함해 올해 발사한 미사일 가격은 3억4천400만 달러를 훌쩍 넘을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분석임.

"北강남호 항로변경은 유엔 결의안 효과"(7/4)

- 불법무기를 실은 것으로 의심되는 북한 선박 강남1호가 갑자기 항로를 변경한 것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 결의안 덕분이라고 개리 러프헤드 미국 해군 참모총장이 4일 밝혔음. 일본군 관계자 및 일본 주둔 미 해군을 만나기 위해 도쿄를 방문한 러프헤드 참모총장은 이날 기자들에게 이같이 밝히고, "유엔 안보리 결의안이 부여한 영향력과 지원은 강남1호를 곤란하게 만들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음.
- 강남 1호는 미얀마로 추정되는 목적지를 향해 보름 가까이 항해하다가 지난달 28일 또는 29일 항로를 변경했음. 러프헤드 참모총장은 지난 일주일여 강남 1호를 주시했으며, 문제의 선박은 현재 동중국해에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고 전했음.
- 강남1호는 유엔 안보리가 지난달 12일 대량살상무기(WMD) 관련 물자를 선적한 것으로 의심되는 선박에 대한 해상검색을 전 유엔 회원국에 촉구하는 내용의 대북 결의안을 채택한 이후 처음으로 미 함정의 추적을 받아 관심을 모았음. 이에 북한은 어떤 방식의 선박 수색도 받아들일 수 없으며, 전쟁선포로 간주하겠다는 강경한 태도를 보여왔음.

- 이런 가운데 합참은 “북한이 오늘 오전 8시께 강원도 원산 인근의 깃대령 미사일 기지에서 미사일 2발을 발사한 데 이어 오전 10시45분과 정오, 오후 2시50분께에도 같은 장소에서 동해로 각 1발씩을 추가 발사했다”고 밝혔음.

北, 단거리미사일 잇따라 발사(7/4)

- 북한이 4일 오전, 오후에 걸쳐 동해상으로 단거리 미사일 7발을 잇따라 발사했음. 합참은 “북한이 오늘 오전 8시께 강원도 원산 인근의 깃대령 미사일 기지에서 미사일 2발을 발사한 데 이어 오전 10시45분과 정오, 오후 2시50분, 4시10분, 5시40분께에도 같은 장소에서 동해로 각 1발씩을 추가 발사했다”고 밝혔음.
- 발사된 미사일 7발은 모두 사거리 400~500㎞로 파악됐으며, 정보당국은 이 중 1~3발은 사거리를 줄인 노동미사일이며 나머지는 스커드-C 미사일의 개량형일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추가 분석 작업을 진행 중임. 북한이 스커드급 미사일을 발사한 것은 2006년 7월5일 이후 3년 만임. 스커드 미사일과 노동 미사일은 모두 남한 전역을 사정권으로 하고 있음.
- 현재 북한은 사거리 300㎞의 스커드-B와 사거리 500㎞의 스커드-C 미사일, 사거리 1천300㎞의 노동미사일, 사거리 3천㎞의 중거리 미사일을 작전 배치해놓고 있음.
- 군 소식통은 “북한이 오늘 발사한 7발 중 일부는 다른 미사일보다 속도가 빨랐다”며 “정보 당국은 이를 사거리를 줄인 노동미사일로 보고 있으며 나머지는 스커드-C 미사일을 개량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음. 군 당국은 당분간 북한의 추가 미사일 발사 가능성은 작은 것으로 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음.
- 이 소식통은 “북한이 깃대령 기지에서 관련 인력들을 철수시키고 자신들이 설정했던 항해금지구역에 배를 다니도록 조치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음. 북한의 이번 미사일 발사는 지난 2일 함경남도 함흥시 이남 동해안 신상리 기지에서 KN-01 단거리 미사일 4발을 발사한 지 이틀 만임. 북한은 깃대령 기지에서 지난달 초부터 3천㎞ 이상의 신형 중거리 미사일과 스커드 및 노동 미사일을 발사할 움직임을 보여왔음.
- 다른 소식통은 “오늘 발사한 미사일은 지난 2일 발사된 미사일과 달리 대기권을 향해 가다 떨어지는 것이어서 단거리 중에서도 비교적 사거리가 길어 위협의 정도가 더 높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음. 그는 “지난 2일 발사한 KN-01 미사일은 군사훈련 차원의 가능성이 큰 것으로 분석됐지만 오늘 발사는 미국의 독립기념일 하루 전날 발사했다는 점에서 정치적인 목적이 다분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음.
- 북한이 이날 일정 시간 간격으로 미사일을 순차적으로 발사한 것과 관련, 한 정부 관계자는 “시차를 두면서 발사해 위기를 점차 고조시

키려는 의도이거나, 만일 시험 발사용일 경우 미사일 성능을 확인하려는 차원일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음. 합참은 "군은 강력한 한미연합태세를 바탕으로 어떠한 북한의 위협과 도발에도 대처할 수 있도록 만반의 대비태세를 갖추고 있다"고 밝혔음.

○ 美 대북제재 전담반, 방중 마무리(7/4)

- 필립 골드버그 전 볼리비아 주재 미국대사가 이끄는 미국 대북제재 전담반이 중국 측과 이틀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 이행 방안을 집중 논의한 뒤 4일 다음 행선지인 말레이시아로 향했음. 주중 미국대사관 관계자는 4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골드버그 대사 일행이 3일까지 이틀간 중국 측과의 회담을 마무리하고 이날 말레이시아로 떠난다"고 밝혔음.
- 2일 베이징에 도착한 미국 대표단은 이틀간 중국 외교부 고위 관리를 비롯, 대북 제재와 관계된 유관 부처 책임자들을 만나 유엔 안보리 제재 이행에 관한 미국의 계획을 설명하고 중국의 적극적인 협력을 당부했음.
- 국무부,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국방부, 재무부 관계자들로 구성된 미국 대표단에는 대북 금융제재를 주도하는 대니얼 글레이저 재무부 부차관보가 포함돼 주목을 받았음. 이에 따라 미국 대표단은 중국의 외교부 외에 국방부, 재정부, 상무부 등 다른 유관 부처와도 협의를 가진 것으로 알려졌음.
- 골드버그 대사는 2일 저녁 숙소인 웨스틴호텔에서 기자들과 만나 "중국 측과 매우 좋은 회담을 했다"면서 "미국은 유엔 대북 결의의 전면적인 이행을 원하며 이를 통해 한반도가 비핵화와 핵비확산의 길로 복귀하게 하는 것이 최종 목표"라고 말했음.
- 미국 대표단은 4일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 도착해 대북 제재 이행에 관해 협의한 뒤 6일께 워싱턴으로 돌아갈 예정임.

○ "러, 北 6자회담 복귀 노력 계속할 것"(7/3)

- 북한의 2차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로 한반도 긴장이 계속되는 가운데 러시아 정부가 북한의 6자회담 복귀를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재차 표명함. 북핵 6자회담 러시아 측 수석대표인 알렉세이 보로다브킨 러시아 외무차관은 2일(현지시각) 관영 리아노보스티 통신과의 회견에서 "북한을 6자회담으로 돌아오게 하고자 북한과 접촉을 계속하고 있다"고 밝힘. 그는 "우리는 모스크바와 평양의 양국 공관을 통해 정기적 접촉을 갖고 있다"면서 "(북한과) 대화채널은 계속 유지되고 있다"고 강조함.
- 그러면서 그는 "우리는 최근 북한 핵 문제와 관련해 한국, 미국, 일본 측 대표들과 협의를 한 바 있다"며 "우리는 현재의 교착 상태를 어떻게 풀 것인가를 궁리 중이며 대화 재개의 기회를 찾고자 애를 쓰고 있다"고 말함. 한편, 보로다브킨 차관은 4일 모스크바를 방문

하는 6자회담 중국 측 수석대표인 우다웨이(武大偉) 외교부 부부장과 만나 북핵 문제와 한반도 정세에 대해 협의할 예정임.

"대북 금융제재, 北해법의 출발"<WSJ>(7/3)

-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대북 금융제재는 북한 해법의 '출발'이어야 하며, 북한이 대화 틀에 복귀한다고 해서 성급히 제재를 완화해서는 안된다고 크리스천 휘튼 전 미 국무부 북한인권부특사가 주장함. 조지 부시 행정부 시절 재임한 휘튼은 3일 월스트리트저널(WSJ) 기고문을 통해 국제사회의 철저하고 일관된 대북 제재공조를 강조하며 이같이 밝힘.
- 휘튼은 미국, 한국, 일본의 대북 제재 조치들을 소개하며 "문제는 이들 국가들이 북한핵폐기를 위해 얼마나 오랫동안 북한을 압박할 것이냐"라며 "북한이 검증가능한 수준에서 핵을 폐기할 때까지 압박을 유지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라고 말함. 미국 정부가 최근 북한 무역회사 남촌강과 이란 소재 홍콩일렉트로닉스를 '북한 핵확산 네트워크'로 지정, 독자적 제재에 착수했지만 북한의 핵과 무기수출을 지원한 혐의를 받고 있는 17개 은행과 기업들에 대한 미 재무부의 금융제재 방안이 훨씬 효력을 발휘할 것이라고 휘튼은 분석함.
- 그는 2005년 북한이 거래하던 마카오의 방코델타아시아(BDA)를 돈세탁 우려대상으로 지정해 북한자금 2천500만달러를 동결시키면서 큰 압박 효과를 거뒀던 점을 상기시킴. 휘튼은 특히 "오바마 행정부는 북한이 대화 틀에 복귀할 경우 그 보상책으로 압력을 서둘러 완화해서는 안된다"고 대북 제재 틀의 지속성을 역설함. 북한의 대화복귀는 수단일뿐이며 상황의 종료가 결코 아니라는 점을 상기시키면서 그는 "성공적인 전략은 북한의 협상테이블 복귀 이상의 더 많은 것들을 포괄하고 있어야 한다"고 말함.
- 대북 압력틀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면서 다각적인 분야의 대북 접근을 개발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함. 북한이 "핵문제와 같은 제한된 이슈를 논의하면서 국제사회를 대상으로 술수를 부리며 은근히 즐기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면서 "북한을 지속적으로 압박하지 않으면 그것을 차단할 수 없다"는 것이 휘튼의 주장임. 그러면서 그는 "미국, 한국, 일본은 북한의 금융기능을 상실시킬 정도의 추가적인 제재옵션도 가능성을 열어둬야 한다"면서 그런 조건에서만 북한과의 효율적인 협상이 가능하다고 주장함.

오바마, 대북 추가제재 가능성 시사(7/3)

-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2일 북한의 핵실험에 따른 제재가 추가로 있을 수 있다면서 북한이 경제문제를 해결하고 국제사회에 편입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핵을 포기하는 것이라고 말함. 오바마 대통령은 내주 이탈리아, 가나 러시아 해외순방에 앞서 이날 백악관에서 AP통신과 가진 기자회견에서 북한의 지난 5월 핵실험과 관련해 규

제가 더 있을 수 있을 수 있다고 밝힘.

- 또 오바마 대통령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는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강조함. 오바마 대통령은 이와 함께 미국은 대북 제재를 추진하고 있지만, 북한이 핵협상 테이블로 복귀하도록 "문은 열어놓을 것"이라고 강조함. 오바마 대통령은 이어 북한이 핵 프로그램을 포기하는 것만이 경제난 극복과 국제사회 편입을 위한 유일한 길이라고 강조하면서 "그 해법이 여전히 유효하다는 점을 북한이 알기를 원한다"고 말함.
- 이와 관련, 로버트 기브스 백악관 대변인은 "대북 제재는 분명히 충격이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미 행정부는 활발한 제재를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말함. 기브스 대변인은 북한이 외부로 무기나 핵관련 물질을 수출하지 못하게 하기 위한 활발한 검색이 최우선적인 관심사라면서 오바마 대통령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들과 함께 북한이 수년 전에 약속한 의무사항을 이행하도록 하기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말함. 그는 또 "우리는 북한을 계속 주시하고 있고 국제사회도 매우 강력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언급하면서 북한이 대화에 복귀하길 기대하고 있다고 말함.
- 이에 따라 오바마 대통령과 기브스 백악관 대변인의 대북 제재 관련 발언은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대화에 복귀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하지 않을 경우 가능한 한 모든 압박 수단을 동원하겠다는 의지를 강조한 것으로 최근에 달라지고 있는 강경입장을 그대로 반영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음.

美국방부 "北미사일 발사 우려"(7/3)

- 미국 국방부 관리는 2일 북한이 동해상으로 지대함 단거리 미사일 4발을 발사한 데 대해 "커다란 우려를 갖고 있다"면서 "그러나 북한의 행동이 예상하지 못했던 것은 아니다"라고 밝힘. 이 관리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관련한 배경 설명에서 "북한의 핵프로그램 개발, 대륙간탄도미사일의 성능 향상과 실험, 확산활동은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고 말함.
- 그는 북한이 이번에 미사일을 발사한 이유에 대해 "미사일 시스템 향상을 통해 제고된 미사일 능력을 과시하고, 국제사회와의 협상에 있어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기 위한 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함. 이어 그는 "북한은 관심을 끌려고 하는 것 같다"면서 "미사일 발사는 그런 관심끌기의 일환으로 여겨진다"고 말함. 그러나 이 관리는 이번 미사일 발사가 지난 12일 채택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결의 1874호에 위반되는지에 대해서는 알 수 없다고 말함.

북, 100km 단거리 미사일 4발 발사(7/2)

- 북한이 2일 오후 동해상으로 지대함 단거리 미사일 4발을 발사함. 군 관계자는 이날 "북한이 오후 5시20분과 6시, 7시50분, 9시20분

께 함경남도 함흥시 이남 동해안 신상리 기지에서 지대함 단거리 미사일을 각각 1발씩 발사했다"면서 "발사된 미사일은 모두 4발"이라고 밝힘. 북한이 지난 5월29일 이후 34일 만에 발사한 단거리 미사일 4발은 모두 100km가량을 비행한 것으로 분석됨.

- 군 관계자는 "북한이 야간에 집중적으로 미사일을 발사한 것으로 미뤄 군사훈련 목적으로 추정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대외적 무력시위 차원에서 단거리 미사일을 발사할 가능성도 있다고 판단, 북한의 군사동향을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고 전함.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은 최대사거리 120~160km의 KN-01 지대함 미사일로, 길이는 5.8m, 직경은 76cm임. 이 미사일은 사거리 83~95km의 실크웜(CSS-C-2) 미사일을 개량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음.
- 군 관계자는 "실크웜의 전자회로를 개선해 발사준비 시간을 단축한 KN-01 미사일이 함정에 배치되면 비교적 사거리가 길어서 우리 해군에 위협이 될 것"이라고 말함. 북한이 신상리 기지에서 미사일을 발사했지만 다른 기지에서의 특이동향은 아직 포착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짐. 군 관계자는 "신상리에서 단거리 미사일이 발사됐지만 강원도 안변군 깃대령을 비롯한 다른 미사일 기지에서의 특이동향은 아직 포착되지 않고 있다"면서 "북한이 동해상에 항해금지구역을 선포했기 때문에 단거리 미사일 발사는 이미 예견됐던 일"이라고 설명함.
- 북한은 지난달 25일부터 이달 10일까지 신상리의 북동쪽 해안선을 따라 직선거리 450여km의 항해금지구역을 선포한 바 있음. 앞서 북한은 2차 핵실험 다음 날인 지난 5월26일에도 신상리에서 지대함 단거리 미사일 3발을 발사했으며, 핵실험 당일부터 지금까지 발사한 단거리 미사일은 모두 10발임. 북한은 단거리 미사일 600여기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美, 中과 대북제재 방안 논의(7/2)

- 필립 골드버그 전 볼리비아 주재 대사가 이끄는 미국 대북제재 전담반이 2일 중국 베이징에 도착, 중국 측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 이행방안을 집중 논의함. 미국 대표단은 이날 중국 외교부 고위 관리들을 만나 유엔 안보리 제재 이행에 관한 미국의 계획을 설명하고 중국의 적극적인 협력을 당부한 것으로 알려짐.
- 골드버그 대사는 회담이 끝난 이날 저녁 숙소인 웨스틴호텔에서 기자들과 만나 "중국 측과 매우 좋은 회담을 했다"면서 "우리의 목표는 한반도의 비핵화와 핵비확산을 위해 유엔의 대북제재 결의를 전면적으로 이행하는 것"이라고 말함. 미국 대표단은 국무부,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국방부, 재무부 관계자들로 구성됐으며 특히 대북 금융제재를 주도하는 대니얼 글레이저 부차관보가 포함돼 주목을 받고 있음. 이에 따라 미국 대표단은 중국의 외교부 외에 국방부와 재정부, 상무부 등 다른 유관 부처와도 협의를 가진 것으

로 관측됨.

- 친강(秦剛) 중국 외교부 대변인도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골드버그 대사가 2일 중국을 방문해 외교부와 유관 부처 책임자와 회담을 가졌다"고 말함. 미국 대표단은 또 이번 방중에서 이달 말 워싱턴에서 처음으로 열리는 제1회 '미·중 전략과 경제대화'에서 논의할 북핵 관련 의제도 조율한 것으로 알려짐. 이들은 3일에도 중국 당국과 대북 제재 관련 논의를 계속한 뒤 이날 저녁 말레이시아 수도 쿠알라룸푸르를 거쳐 6일 워싱턴으로 돌아감.

○ 우다웨이, 북핵 협의차 4개국 방문(7/2)

- 북핵 6자회담 중국측 수석대표인 우다웨이(武大偉) 외교부 부부장이 2일 북핵문제를 협의하기 위해 러시아, 미국, 일본, 한국 등 4개국 방문길에 올랐다고 친강(秦剛) 중국 외교부 대변인이 발표함.

○ "北 강남호 돌연 항로 변경"(7/1)

- 금수물자를 선적한 채 미얀마로 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온 북한 강남호가 갑자기 항로를 변경, 왔던 뱃길로 되돌아가고 있다고 AP 통신이 30일 익명의 미 행정부 관리의 말을 인용, 보도함. 이 관리는 그러나 강남호가 북한내 출발지인 남포항으로 돌아가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목적지를 향해 항로를 바꾼 것인지는 불분명하다고 말했다고 통신은 전함.
- 강남호는 지난 17일 남포항을 출발할 당시부터 미국 정보당국으로부터 대량살상무기(WMD) 혹은 재래식 무기를 선적했다는 의심을 받았고, 이후 이지스 구축함 존 매케인호의 추적을 받아옴. 강남호는 보름 이상 항해를 계속하다가 지난달 28일 혹은 29일 항로를 변경했으며, 30일에는 베트남 연안에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고 통신은 덧붙임.

○ 반 총장, 아소 총리와 북핵 등 논의(7/1)

- 일본을 방문 중인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은 1일 아소 다로(麻生太郎) 총리와 회담을 갖고 북한 핵 문제와 관련, 한반도의 비핵화를 실현하기 위해 국제사회의 협력태세를 강화하는 게 필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함. 반 총장과 아소 총리는 이날 회담에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對) 북한 제재결의를 착실히 이행하는 게 중요하다는 점을 확인함.
- 아소 총리는 북한 관련 선박의 화물검사를 위한 특별조치법안을 이번 국회에 제출하는 등 일본도 화물검사에 적극 참여할 것임을 전함. 회담 후 가진 공동기자회견에서 반 총장은 북핵 문제의 해결을 위해 6자회담을 재개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함. 반 총장은 또 "나는 한반도의 검증가능한 비핵화를 달성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함. 아소 총리는 북한 핵문제에 대해 북한의 핵보유

를 절대 인정할 수 없다는 점을 역설함. 그는 "북한의 미사일 시험발사와 핵실험은 국제사회에 심각한 위협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우리는 북한의 핵무기 보유를 절대 용인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함.

- 이날 회담에서 반 총장은 지구온난화 방지를 위해 일본이 적극적인 역할을 해줄 것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짐. 아소 총리는 이에 대해 오는 2020년까지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와 관련, 2005년에 비해 15%로 줄이는 일본의 중기목표를 설명하고 이해를 구한 것으로 전해짐. 반 총장은 이에 앞서 제1야당인 민주당의 하토야마 유키오(鳩山由紀夫) 대표와도 면담함. 하토야마 대표는 이 자리에서 오는 9월 유엔총회에는 일본에서 총리가 참석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차기 중의원 선거에서 승리해 자신이 총리로서 총회에 참석할 수 있을 것이라는 데 대한 자신감을 보임.

○ 日, 北 미사일 4일 또는 8일 발사 경계(7/1)

- 일본 방위성은 북한이 동해 연안부에 항해금지구역을 설정함에 따라 미국 독립기념일인 4일이나 고(故) 김일성 주석 기일인 8일에 탄도미사일을 발사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고 경계를 강화하고 있다고 교도(共同)통신이 1일 보도함. 일본은 당분간 E3 공중경계관제기(AWACS)와 이지스함을 동해쪽에 배치해 경계를 하는 한편 발사 징후를 무선으로 탐지할 수 있는 만반의 태세를 갖추고 있다고 통신이 전함.
- 일본 정부는 지난 4월 북한의 로켓 발사시에는 지대공유도탄 패트리엇(PAC3)을 이와테, 아키타현 등에 배치해 요격태세를 취했으나 북한이 사전에 태평양쪽에 위험지역을 설정하고, 로켓이 대기권 밖 상공을 통과함에 따라 요격은 이뤄지지 않음. 북한이 이번에 설정한 구역은 모두 자국 연안부로 일본 정부에서는 태평양쪽에 위험구역을 설정하지 않은 이상 일본 상공을 통과할 가능성이 낮을 것으로 보고 있음.
- 이에 따라 이번에는 어디에 PAC3를 배치해야할 지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짐. 설정 구역은 북한의 원산 연안 동해상의 길이 약 450km에 폭 110km의 해역으로 오는 10일 까지임. 북한은 1일 동해 연안 등 10개소를 오는 11일까지 금지구역으로 추가 설정한 것으로 알려짐.

○ "5자회담, 비공식이면 가능"<中학자들>(7/1)

- 북한이 6자회담 회담장에 나오지 않겠다면 북한을 뺀 나머지 5개국 간의 비공식 5자회담은 가능하다고 중국의 한반도문제 전문가들이 1일 밝힘. 진찬룽(金燦榮) 중국 런민(人民)대 국제관계대학원 부원장은 이날 중국 관영 영자지 차이나 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5개국들이 가끔 만나 북핵문제를 협의하는 것은 좋다"고 말함. 진 부원장은 "그러나 5개국 대표들이 공식적으로 만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왜냐하면 북한이 6자회담에 복귀하는 것을 차단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함.

- 류장융(劉江永) 칭화(淸華)대 국제문제연구소 교수도 "한반도 비핵화와 지역 평화라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면 5자회담을 비롯해 어떤 형태의 대화도 시도해야 한다"고 말함. 류 교수는 "5개국이 회담을 통해 일정 수준에서 대화를 나눈 다음, 협의 내용을 북한에 통보하는 방법이 좋다"며 "이는 5개국의 진지함을 보여주는 것이며 현 상황을 타개할 수도 있다"고 제시함.
- 친강(秦剛)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지난달 30일 정례 브리핑에서 5자회담에 관한 질문을 받고 "중국은 6자회담을 재개하기 위해 유관 당사국들과 대화와 타협을 지속할 것"이라고 답변함.

아소 "5개국 연대로 북한 압박할 것"(6/30)

- 일본의 아소 다로(麻生太郎) 총리는 30일 외교정책에 관한 연설에서 북한의 핵 및 납치문제와 관련, 일본은 6자회담에서 북한을 제외한 한국, 미국, 중국, 러시아 4국과 긴밀히 연대해 북한에 강력한 압박을 가해나갈 방침이라고 밝힘. 아소 총리는 일본의 안보에 대해서는 "미·일 동맹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것이 불가결하다"며 동맹 강화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함.
- 아소 총리는 또한 북한 관련 선박을 대상으로 한 화물검사특별조치법안과 관련, 유엔안보리의 제재결의에 포함된 금융 제재와 화물검사 실시를 위해 "구체적인 행동을 취할 것이다"며 이번 국회에 제출해 통과시킬 것임을 밝힘.
- 한편 아소 총리와 한국의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28일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5자회담 개최와 관련, 일본에서는 오는 7월 23일 태국에서 열리는 아세안 지역포럼(ARF)에서 북핵 문제를 협의하기위해 5자회담을 갖는 방향으로 조정이 이뤄지고 있다고 요미우리(讀賣)신문이 보도함.

"5자회담 성사 가능성 없다"<日 외무차관>(6/30)

- 야부나카 미토지(藪中三十二) 일본 외무성 사무차관은 29일 북한을 난관에 봉착한 비핵화 협상으로 복귀시킬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이른바 5자회담의 구체적인 성사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없다고 말함. 야부나카 차관은 기자회견에서 "(5자회담의) 구체적인 실현 가능성이 있느냐고 묻는다면 그렇지 않다"고 말함.
- 야부나카 차관의 발언은 이명박 대통령과 아소 다로(麻生太郎) 일본 총리가 중국, 러시아, 미국 등과 함께 5자회담을 여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합의한 지 하루 만에 나온 것임. 야부나카 차관은 6자회담이 구체적인 결과를 내지 못했다면서 "어떤 접근법이 더 나은 결과를 낼지 진지하게 논의할 시점이 됐으며 5자회담은 그런 접근의 하나"라고 덧붙였음.

나. 미·북 관계

○ "北, 미사일발사로 아무 것도 변화 못시켜"(7/5)

- 미국의 고위 당국자는 미국 독립기념일에 맞춰 4일 이뤄진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 발사와 관련, 이번 미사일 발사는 북한을 더욱 더 고립으로 이끌 것이라고 밝혔다고 워싱턴포스트(WP)가 5일 보도했음. 이 당국자는 "그것은 아무 것도 변화를 못 시킬 것"이라면서 "우리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결의에 포함된 (대북) 제재를 계속 이행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신문은 전했음. 신문은 이번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하루에 발사한 미사일로는 3년 만에 가장 많은 것이라고 전했음.
- 이와 관련, 데니스 곰리 미 몬트레이연구소 비확산연구센터 선임연구원은 북한이 한꺼번에 많은 미사일을 쏜 것은 미사일방어망을 압도할 수 있다는 점을 경고한 것이라고 분석했음. 그는 "미사일방어의 가장 큰 과제는 여러 발의 미사일에 대처하는 것"이라면서 7발의 미사일을 발사한 것은 미사일 방어망이 대처 능력을 넘는 것임을 지적했음.

○ 美 부통령 "北 어려운 결정에 직면할 것"(7/5)

- 조지프 바이든 미국 부통령은 북한의 최근 미사일 발사와 관련, 북한이 점차 국제사회로부터 고립되자 "관심을 끌려고 한다"며 북한이 가까운 미래에 "매우 어려운 결정"을 해야할 때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음. 바이든 부통령은 5일(현지시각) ABC 방송과 인터뷰에서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해 "이는 거의 예측 가능한 행동이 됐다"며 "(북한이) 관심을 끌려고 하는 행동 같다"고 말했음.
- 바이든은 북한 미사일 발사에 지나친 관심을 갖고 싶진 않다면서 북한을 더욱 고립시키는 정책을 마련하는 데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음. 그는 "지금까지 우리의 정책이 전적으로 옳았다고 생각한다"며 "우리는 북한을 더욱 고립시키는 방안과 관련, 북한에 중요한 나라들을 결집하는 데 성공해왔다"고 강조했음.
- 바이든은 특히 중국과 러시아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북한에 대한 제재에 참여한 것을 두고 "중대한 전환"이라고 평가하면서, "우리의 정책은 북한이 기대를 걸었던 그런 나라들과 함께 북한에 계속해서 압력을 행사하는 것"이며 앞으로 "북한이 매우 어려운 결정을 내려야 할 때가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음.
- 한편, 미 국무부 칼 덕워스 대변인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북한은 긴장을 일으키는 행동들을 중단하고, 비핵화 대화 및 2005년 미국과의 공동합의를 이행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음.

"美, 말레이시아 北계좌 확인·추적중"(7/5)

- 미국은 말레이시아에서 북한의 의심스러운 계좌 수 개를 발견해 동결 등 봉쇄 조치를 추진중인 것으로 4일 전해졌음. 워싱턴의 핵심 소식통은 이날 "말레이시아에 북한의 수상한 계좌가 몇 개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면서 "오바마 행정부가 이에 대한 봉쇄에 나섰다"고 전했음. 이 소식통은 미국의 추적을 받는 말레이시아의 북한 계좌가 몇 개인지 등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전하지 않았으나 "수 개"라고 언급했음.
- 필립 골드버그 조정관이 이끌고 있는 미국의 대북제재전담반이 중국에 이어 말레이시아를 찾은 것도 이 때문으로, 골드버그 조정관 일행은 5일 말레이시아 관련 당국자와 만나 북한 계좌 봉쇄 문제를 협의할 것으로 전해졌음. 앞서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달 26일 나지브 라자크 말레이시아 총리와 전화 통화를 갖고 북한 문제를 논의하기도 했음. 소식통은 "당시에도 이 문제가 논의된 것으로 안다"고 전했음.
- 이와 관련, 북한이 미얀마에 수출하는 군사장비 등에 대한 대금을 말레이시아 계좌를 통해 받고 있어 미국이 이를 차단하려고 한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음.
- 지난 2005년 미국이 마카오의 방코델타아시아(BDA)를 '돈세탁 우려대상'으로 지정하면서 북한 자금 2천500만달러를 동결했던 점으로 미뤄볼 때 말레이시아 내 북한 계좌에도 상당한 금액이 예치된 것으로 추정됨.
- 말레이시아는 북한과 비자면제협정까지 체결할 정도로 상대적으로 북한인들의 왕래가 빈번한 곳임. 오바마 행정부가 전방위 대북 압박에 나선 가운데 동남아 국가 내 북한 계좌의 봉쇄를 추진중인 것은 미국의 대북 금융봉쇄가 본격화됐다는 점을 의미한다고 소식통들은 지적했음.
- 앞서 오바마 행정부는 지난달 30일 북한 미사일 프로그램을 지원한 혐의로 이란에 소재한 '홍콩일렉트로닉스'의 자산을 동결하는 등 제재조치를 취하기도 했음.

"北미사일발사 강력한 후계자 부각의도"<WP>(7/4)

- 북한이 4일 7기의 단거리 미사일을 동해상으로 잇따라 발사하며 무력시위를 한 것과 관련,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후계자로 지목되고 있는 셋째 아들 김정운이 강력한 지도자가 될 것이라는 점을 부각시키려는 의도가 있다고 워싱턴 포스트(WP)는 보도했음.
- 포스트는 "북한은 이날이 미국 최대국경일인 독립기념일인데 이를 무시하고 7기의 미사일을 발사했다"면서 "북한의 최근 호전적인 태도는 여러 전문가의 견해에 따르면 북한에서 진행되고 있는 후계자 승계과정과 연관이 있다"고 지적했음.
- 포스트는 "올해 67세로 작년 여름 뇌졸중을 앓은 이후 쇠약해진 모

습인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이 26세인 정운을 후계자로 옹립하려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핵실험과 다수의 미사일 발사, 빈번한 전쟁 위협은 정운이 김 위원장과 마찬가지로 외부의 압력에 저항하는 강력한 지도자라고 과시하는 방법일 수 있다고 전문가들이 분석하고 있다"고 전했음.

- 포스트는 또 북한은 또 다른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위협하고 있지만 한국군 관계자들에 따르면 발사준비를 하는데 최소 수일 소요되는 또 다른 장거리미사일은 아직은 준비상황이 관측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음.

美국무부 "北 긴장고조 행위해선 안돼"(7/4)

- 미국 국무부는 4일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관련,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 행위라면서 긴장을 고조하는 행위를 해선 안 된다고 밝혔음. 국무부 관계자는 "북한의 이런 행위는 도움이 안된다"면서 "북한은 긴장을 고조하는 행위를 자제하고 비핵화 회담과 2005년 9.19 공동성명 합의 사항을 준수하는데 관심을 쏟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음.
- 이 관계자는 또 "북한이 해야 할 일은 국제적인 의무와 약속을 충실히 이행하는 것"이라면서 이번 북한 미사일 발사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사항을 충실하게 이행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덧붙였음.

美안보보좌관, 北도발에 맞춤대응 시사(7/4)

- 제임스 존스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3일 미국 독립기념일(7월4일)을 전후해 북한이 도발에 나선다면 도발 행태와 수위를 보고 맞춤 대응에 나설 것임을 시사했음.
- 존스 보좌관은 이날 '매클래치' 신문과 가진 인터뷰에서 "우리는 동원가능한 몇가지 대응 옵션을 갖고 있다"면서 "우리의 대응은 북한이 앞으로 수일간, 수주간에 걸쳐 보여줄 행동이 무엇이냐에 따라 달라질 것"이라고 말했음.
- 또 존스 보좌관은 "미국은 역내 이해관계를 공유하는 러시아, 중국, 일본, 한국과 지속적이면서도 열린 대화를 이어나갈 것"이라고 밝혀 대북 대응시 이들 국가와 충분한 협의를 거치겠다는 뜻도 내비쳤음. 존스 보좌관은 그러나 북한의 미사일 요격 등 구체적인 대응방안과 관련해서는 언급을 하지 않았음.

北신문 "보복타격 전투동원 태세 유지"(7/3)

- 북한 군대와 주민은 미국의 "반공화국 군사적 압살정책을 높은 각성을 갖고 주시"하면서 미국이 북한의 "자주권과 안전을 조금이라도 침해한다면 즉시에 맵짠 보복타격을 가할 만단의 전투동원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북한 내각 기관지 민주조선이 주장했음. 이 신문은 지난달 30일자 '월간 국제정세 개관 -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

정을 파괴하는 역사의 반동들'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한반도에 "사소한 우발적 요인에 의해서도 전면전쟁이 벌어질 수 있는 위험한 군사적 긴장상태가 조성돼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북한의 온라인 매체 '우리민족끼리'가 3일 전했음.

- 민주조선은 "이 엄중한 정세 하에서 우리에게는 자체의 핵전쟁 억제력을 강화하고 적들의 대조선 군사적 압살정책에 초강경으로 맞서는 수 밖에 다른 도리가 없다"며 "제재든 압력이든 우리에게는 그 따위가 통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음.
- 이어 신문은 "조선반도에서 긴장상태를 완화하고 평화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미국의 대조선 적대시 정책 포기가 필수적 요구로 제기된다"며 "미국이 진정으로 조선반도 정세 완화와 평화보장에 관심이 있다면 시대착오적인 대조선 적대시 정책을 당장 걷어치워야 한다"고 요구했음.

"北의 하와이 타격 능력에 회의적"<CSM>(7/3)

- 북한이 발사하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이 실제 하와이를 포함한 미국 본토를 타격할 능력을 갖추고 있을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미국 일간 크리스천 사이언스 모니터(CSM)가 2일 보도. 이론상 북한은 ICBM 보유국으로 알려져 있으며, 그 기술이 완벽히 구사될 경우 7천100km 가량 떨어진 하와이 타격이 불가능하지 않음.
- 그러나 CSM은 그간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 발사 시험을 할 때마다 중대 결함이 발생했던 점을 감안할 때 그같은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판단임. 탄두가 설사 대기권 재진입에 성공한다 해도 소형이어서 미미한 타격에 그칠 가능성이 높으며 육지 목표물을 정확히 타격할 수 있을 지도 의문이라고 CSM은 지적했음.
- 미 미사일 전문가들로 구성된 '우려하는 과학자 모임(UCS)' 소속 데이비드 라이트 수석연구원은 "북한이 실제 타격능력을 갖췄다고 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라고 말했음. 지난달 일본의 한 언론이 미국의 독립기념일에 북한이 ICBM을 발사할 가능성을 보도한 이후 미 국방부는 하와이 인근에 미사일 요격기와 레이더를 추가 배치했음.

美 "대북 추가 식량지원계획 없어"(7/2)

- 미국 국무부는 1일 북한에 대한 식량지원과 관련, 누구에게 전달되는지를 확인할 수 없으면 추가로 식량을 지원할 수 없다고 밝힘. 이언 켈리 국무부 대변인은 "우리는 현재 북한에 추가로 식량을 지원할 계획이 없다"면서 "추가 식량지원은 식량지원이 적절하게 활용된다는 보장이 있어야만 할 것"이라고 말함.
- 이어 켈리 대변인은 "우리는 여전히 북한 주민들의 생활상에 대해 매우 걱정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우리는 (식량지원에 대한) 모니터링과 접근 등 적절한 관리프로그램이 필요한 데 현재 그것이 없다는

점을 매우 우려한다"고 덧붙임. 이는 북한 주민들에 대한 인도적인 식량지원이 본래 목적대로 이뤄지는지 또는 군량미 등으로 전용되고 있는지 등에 대해 전혀 알 수가 없어 현 상태에서는 더는 지원을 할 수 없다는 의미로 풀이됨.

- 켈리 대변인은 북한이 지난 3월 미국의 식량지원을 거부했다고 상기시키면서 북한에서 식량지원 활동을 관장해온 비정부기구(NGO) 모니터링 요원들을 추방한 사실을 언급함. 하지만 켈리 대변인은 북한이 핵문제로 외부세계와 대치하는 바람에 원조가 줄어 북한 주민 특히 어린이들이 심각한 식량난에 직면하고 있다는 유엔 세계식량계획(WFP)의 지적에 대해서는 우려를 표시함.
- 앞서 토빈 듀 WFP 평양사무소장은 이날 북한이 지난 5월 핵실험을 강행한 이후 식량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기부는 한 건도 없었다면서 WFP의 대북식량지원 규모도 기존의 계획보다 3분의 1 수준으로 급감, 1990년대 중반 이후 가장 줄어들었다고 밝힌 바 있음. 이번 대북 식량 추가지원 불가 선언은 미국 정부가 전날 발표한 핵과 미사일 확산 관련 북한과 이란 기업에 대한 제재와 더불어 북한에 대한 전방위 압박이 본격화됐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보임.

美, 北핵확산 관련기업 자산동결(7/1)

- 미국은 30일 북한의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에 연계되거나 이를 지원한 혐의를 받고 있는 북한의 무역회사와 이란 소재 한 기업에 대해 자산동결 및 거래금지 등의 제재조치를 취함. 미 국무부는 이날 우라늄농축 장비구입에 관여해온 북한 무역회사 남촌강(NCG)이 보유한 미국내 자산에 대해 동결조치를 취하고 미국 기업 및 개인들과의 거래를 금지한다고 밝힘.
- 국무부는 성명을 통해 "남촌강은 평양에 소재한 핵관련 북한기업으로 1990년대 말 이후 우라늄 농축프로그램에 특별하게 사용할 수 있는 알루미늄관과 다른 장비들을 구매하는 일에 관여해 왔다"고 말함. 국무부는 "남촌강을 행정명령 13382호에 근거해 북한의 핵확산 네트워크로 지정했다"면서 "행정명령 13382호는 대량살상무기 확산활동을 하거나 이를 지원하는 자들의 자산을 동결해 미국의 금융과 상거래 시스템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고립화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고 말함.
- 행정명령 13382호의 핵확산활동 관련 기업으로 지정되면 모든 미국인과의 거래가 금지되고 미국내 자산에 대한 동결 조치를 받음. 국무부는 또 "북한의 지난 4월25일 대포동 2호 미사일 발사, 5월25일 핵실험은 북한의 확산활동에 대해 지속적인 경각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점을 여실히 보여줬다"고 밝힘.
- 이어 국무부는 이번 핵확산 관련기업 지정은 북한의 기업이 핵무기와 이를 실어나를 수 있는 미사일 개발을 위해 금융시장 및 상거래 시스템에 접근하는 것을 지속 차단하기 위한 미국 정부 노력의 일

환이라고 덧붙임. 이와는 별도로 미 재무부는 이날 북한 미사일 프로그램을 지원한 혐의로 이란의 남부 키시섬에 소재한 '홍콩일렉트로닉스'에 대해 제재 조치에 들어갔다고 밝힘.

- 재무부는 성명을 통해 홍콩일렉트로닉스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의해 지난 4월 제재대상으로 선정된 북한의 단천상업은행과 조선광업개발무역회사(KOMID)에 지원을 제공했다면서 이 기업은 북한에 미사일 개발 등과 연계된 수백만 달러를 이란에서 북한으로 송금한 의혹을 받고 있다고 말함. 재무부는 또 단천상업은행은 탄도미사일 판매 금융거래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조선광업개발무역회사가 유엔 안보리 제재를 받고 있는 샤히드 헤마트 인더스트리얼 그룹(SHIG)으로 탄도미사일을 판매하는 금융거래에도 관여해 왔다고 지적함.
- 또 유엔 안보리 제재를 받고 있는 이란 세파은행의 여러 지점과도 활발한 관계를 유지해옴. 이러한 단천상업은행과 세파은행과의 관계는 북한과 이란의 확산관련 거래를 잘 보여주는 대목이라는 것이 재무부의 설명임. 스튜어트 레비 재무부 테러·금융정보담당 차관은 "북한은 홍콩일렉트로닉스와 같은 위장기업들(front companies)을 활용하고 있고, 자신들의 금융거래의 본질을 숨기기 위해 다른 여러 속임수들을 이용하고 있다"면서 "오늘의 조치는 북한이 국제 금융시스템을 악용하는 것을 막기 위한 우리의 총체적 노력의 일환"이라고 강조함.
- 이번 조치는 북한이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른 금융제재를 피하기 위해 각종 속임수를 동원한 거래를 할 가능성이 있다면서 버락 오바마 정부가 지난 18일 주의보를 발령한 뒤 나온 첫 구체적 조치임. 특히 북한과의 거래를 이유로 북한 외 기업에 대해 자산 동결 등 미국이 제재 조치에 나선 첫 조치로, 외국 기업의 북한과의 거래 중단 등 파장이 적지 않을 전망임.
- 백악관도 이번 조치는 미국 정부가 북한의 핵과 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 확산에 얼마나 심각한 우려를 가지고 있는지를 잘 보여주는 것이며 현 단계에서 이 같은 대북 제재와 감시가 최상의 방안이라고 본다고 밝힘. 로버트 기브스 백악관 대변인은 "우리는 북한이 준수해야 할 책임에 대해 분명한 태도를 보여왔다"면서 "오늘 조치는 우리가 심각하게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지를 잘 보여준다고 생각한다"고 말함.
- 기브스 대변인은 이번 조치를 빌미로 한 북한의 도발 가능성까지 여러 변수들을 함께 고려했지만 "최상의 방안은 오늘 취한 조치들과 진행상황을 계속해서 감시하는 것이라는 결론을 내렸다"고 말함. 이와 관련, 월스트리트 저널은 이날 미국 정부는 북한의 핵과 무기수출을 지원한 혐의를 받고 있는 최대 17개의 북한 은행과 기업들에 대해 제재를 가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음.

美, 北미사일개발 지원 이란 기업 제재(7/1)

- 미국은 30일(현지시간) 북한 미사일 프로그램을 지원한 혐의로 이란인 소유의 한 회사에 대해 제재를 가했다고 발표함. 미 재무부는 이날 이란의 남부 키시섬에 소재한 '홍콩일렉트로닉스'가 북한의 단천상업은행과 조선광업개발무역회사에 대해 지원을 제공했다면서 이같이 밝힘. 단천상업은행과 조선광업개발무역회사는 북한의 장거리 로켓발사 이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의해 지난 4월 제재 대상으로 선정된 곳임.
- 홍콩일렉트로닉스는 북한에 미사일 개발 등과 연계된 수백만 달러를 이란에서 북한으로 송금한 의혹을 받고 있음. 스튜어트 레비 재무부 테러·금융정보담당 차관은 "북한은 홍콩일렉트로닉스와 같은 위장기업들(front companies)을 활용하고 있고, 자신들의 금융거래의 본질을 숨기기 위해 다른 여러 속임수들을 이용하고 있다"고 말함.
- 그는 "이는 책임있는 은행과 정부들이 합법적인 것과 불법적인 북한의 거래를 구별하는 것을 거의 불가능하게 만들고 있는 것"이라면서 "오늘의 조치는 북한이 국제금융시스템을 악용하는 것을 막기 위한 우리의 총체적 노력의 일환"이라고 강조함. 이번 조치는 북한이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른 금융제재를 피하기 위해 각종 속임수를 동원한 거래를 할 가능성이 있다면서 버락 오바마 정부가 지난 18일 주의보를 발령한 뒤 나온 첫 구체적 조치임. 특히 북한과의 거래를 이유로 북한 외 기업에 대해 자산 동결 등 미국이 제재 조치에 나선 첫 조치로, 외국 기업의 북한과의 거래 중단 등 파장이 적지 않을 전망임.

다. 중·북 관계

中, 北미사일 관련국들에 냉정 유지 촉구(7/5)

- 중국이 5일 북한 핵문제 관련국들에 대해 냉정과 자제를 유지해줄 것을 촉구하고 나섰음. 친강(秦剛)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홈페이지에 올린 성명을 통해 이같이 밝혔음.
- 친 대변인은 또 "중국은 관련 상황을 주의 깊게 보고 있다"면서 "관련국들은 지역 평화와 안정 유지에 함께 노력하기를 바란다"고 말했음.

中, 北 미사일 발사에 불만 간접 표시(7/5)

- 중국은 북한이 2일에 이어 4일 동해 상에서 다시 미사일 7기를 발사한 데 대해 간접적으로 불만을 표시했음. 러시아를 방문 중인 우다웨이(武大偉) 중국 외교부 부부장은 알렉세이 보로다브킨 러시아 외무차관과의 회담에서 각 당사국이 냉정함을 되찾고 동북아

지역의 안정을 해칠 수 있는 어떤 조치도 자제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고 중국 언론매체들이 5일 보도했음.

- 우다웨이 부부장과 보로다브킨 차관의 이 같은 합의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 직후 나온 것이어서 북한의 잇따른 미사일 발사에 대한 중국 측의 불만을 나타낸 것으로 해석됐음. 중국 외교부는 이날 오전 현재 북한 미사일 발사에 대해 공식 논평을 하지 않았으나 북한의 행동으로 한반도 주변의 정세가 악화하고 역내에 군비확장 경쟁이 일어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관측된다고 베이징의 외교 소식통들이 전했음.
- 중국 언론매체들은 이날 연합뉴스를 인용, 북한의 미사일 발사 사실을 논평 없이 즉각 보도하고 미국과 일본의 반응을 구체적으로 소개했음. 언론들은 북한이 미국 독립기념일에 미사일을 발사한 사실을 중시하고 한국과 미국이 군사적으로 강력한 대응체제에 돌입한 데 주목했음. 한국과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와 긴밀히 연대해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해나갈 방침이라는 일본 정부의 성명 내용도 그대로 인용, 보도됐음.

○ 中 "FT 김정운 보도 사실무근"(6/30)

- 중국 정부는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3남 김정운이 극비리에 방중했다는 영국 파이낸셜 타임스(FT)의 보도에 대해 '사실무근'이라며 재차 공식 부인함.
- 친강(秦剛)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30일 정례브리핑에서 일본 아사히(朝日)신문에 이어 FT도 같은 내용의 보도를 한 것과 관련, "없는 사실을 날조한 것으로 아무런 근거가 없는 것"이라고 부인함. 친 대변인은 중국 성어에 '주화입마(走火入魔: 일정한 정도나 수준을 넘어 도가 지나치다)'란 것이 있다고 소개해 최근 잇따른 외신들의 보도가 지나치다는 입장을 우회적으로 드러냄.

○ <中, 사면초가 北 숨통 터주기 나섰나>(6/29)

- 한국 정부가 제시한 5자협의에 반대 입장을 표명하면서 대북 제재에서 국제사회와 이견을 보이고 있는 중국이 북한에 대한 우호 조치를 잇달아 취하고 있음. 중국 상무부는 지난해 1월부터 부과해오던 일부 수출품목에 대한 임시 관세를 다음 달부터 전면 취소키로 결정함. 이에 따라 쌀, 밀, 콩 등 곡물류와 화학비료, 철강재 등에 추가로 부과되던 임시 수출관세가 전면 철폐됨.
- 중국의 이번 조치가 반드시 대북지원을 위한 것이라고는 할 수 없지만 핵 실험 이후 유엔의 제재 조치로 곤경에 처한 북한의 숨통을 터줄 수 있는 것만은 분명해 보임. 쌀의 경우 5%를 부과하는 등 곡물류에 최고 25%까지 임시 관세를 부과하면서 중국의 북한 곡물 수출이 급감하는 바람에 북한은 식량 확보에 큰 어려움을 겪어옴.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지난 3월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중국의 임시

관세 조치 여파로 지난해 11월부터 올 1월까지 북한이 중국을 통해 수입한 곡물은 1만2천694t으로 전년 같은 기간의 10만8천109t의 10분의 1 수준에도 못 미칠 정도로 줄었음.

- 중국의 대북 전문가는 "쌀 등 곡물류는 이윤이 많지 않아 25%까지 관세를 추가 부과한 것은 사실상의 전면적인 수출 중단 조치였다"며 "이번 조치로 한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북한이 용이하게 곡물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고 분석함. 최고 75%까지 부과됐던 비료에 대한 임시 관세 폐지 역시 북한의 식량 증산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임.
- 북한은 지난해 한국의 비료 지원이 중단되자 지난해 11월부터 올 1월까지 2만5천608t의 비료를 수입함. 전년 같은 기간 635t에 비해 40배 이상 늘어난 양임. 이런 상황에서 중국의 임시 관세 폐지 조치는 북한이 저가에 화학비료를 확보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준 셈임. 지난 4월부터 투먼과 안투, 단둥 등에서의 북한 변경관광을 3년여 만에 허용한 중국은 핵 실험 이후에도 이 조치를 변함없이 유지하고 있음. 지린성은 최근 투먼에서 북한의 남양과 청진, 칠보산 등을 관광할 수 있게 하는 관광협약을 북한 측과 체결, 본격적인 변경관광 채비에 나섬.
- 상하이에서는 북한의 핵 실험 직후인 지난달 27일 20여명의 중국 관광객을 모집, 5일간의 일정으로 평양 관광에 나선데 이어 관광 코스를 확대한 새로운 상품을 개발, 다음달 초 2차 북한관광을 실시키로 하고 관광객을 모집중임. 중국의 변경관광 재개에 따라 북한 나진에 있는 임페리얼 호텔 내 카지노도 다시 영업을 재개함. 이 카지노는 주로 북한 관광에 나서는 중국인들이 애용하는 곳으로 3년전 관료들이 상습적으로 도박을 하다 적발되면서 중국 당국이 변경관광을 중단시키는 바람에 폐업했었음.
- 옌볜조선족자치주의 한 공무원은 "변경관광 재개에 맞춰 임페리얼 호텔 카지노가 지난달 1일부터 영업을 재개했다"며 "하루 50여명 정도가 무역 등을 위해 나진으로 넘어가고 있으며 이 카지노에도 들르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귀띔함. 중국 당국이 사실상 나진에서의 도박을 묵인함으로써 북한은 새로운 외화벌이 수단을 확보할 수 있게 됨. 익명을 요구한 중국의 대북 전문가는 "비록 유엔 제재에는 동의했지만 북한은 여전히 중국을 대신해 극동을 방어해주는, 중국에 순망치한(脣亡齒寒)의 존재"라며 "핵 실험 등을 둘러싼 북한의 행위가 곱지 않더라도 한·미·일 동맹에 의해 북한이 완전히 고립되게 놓아 둘 수 없는 게 중국의 입장"이라고 말함.

"김정운 이달 10~17일 중국방문"<FT>(6/29)

-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후계자로 지명된 것으로 알려진 3남 김정운이 중국 정부의 공식 부인에도 불구, 이달 중순 중국을 방문한 것은 사실이라고 영국 일간 파이낸셜 타임스(FT)가 복수의 외교·정보·

군 소식통을 인용해 29일 보도함. 이 신문에 따르면 김정운은 지난 10일 극비리에 비행기편으로 베이징에 도착, 중국 고위 인사들과 만났으며 중국 체류기간에 광저우, 상하이, 다롄 등을 차례로 들른 후 17일 평양으로 귀환함.

- 김정운의 방중길에는 조명록 인민군 총정치국장겸 국방위원회 제1부위원장, 김정일 위원장의 매제인 장성택 노동당 행정부장 등 북한의 고위 인사들이 동행했다고 FT는 밝힘. 방중 기간 후진타오(胡錦濤) 국가주석과 면담했는지 여부는 불명확하지만, 김정운이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부주석, 장쩌민(江澤民) 전 중국 국가주석과 회동했다고 김정운의 중국 체류 일정에 관여한 관계자가 전함.
- 이들 회동의 초점은 북한의 핵 보유 의지, 핵무기 실험문제였고, 중국의 채무 탕감, 대북 에너지 원조 등도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고 FT는 보도함. 김정운 방중의 주 목적은 김정일 위원장을 이은 북한 권력 승계자로서 정통성을 구축하고, 북한의 최대 맹방인 중국과의 외교적 경험을 쌓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분석함.
- 또 북한 내부적으로 권력 승계작업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중국 측에 알리고, 불과 26세의 나이로 경험이 일천한 김정운에 대한 지지를 중국으로부터 확보하기 위한 목적도 담겨 있다는 것. 익명을 요구한 한 전문가는 “김정운은 자신의 힘으로 중국의 지도자급 인사들을 만나기에는 너무 어리기 때문에 장성택 부장을 비롯, 북한의 고위 인사들이 그를 수행했다”고 FT에 말함.
- 김정운은 방중 기간 일반인의 투숙이 제한된 중국 군부의 안가 호텔에서 묵었던 것으로 알려짐. 베이징, 광저우, 상하이, 다롄 등으로 이어진 김정운의 중국 체재 일정은 지난 2006년 1월 김정일 위원장의 중국 공식방문 일정과 동일하다고 이 신문은 설명함.

라. 일·북 관계

○ 日, 北미사일 발사 안보리서 제기 방침(7/5)

- 일본 정부는 북한이 잇달아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는 등 도발을 계속함에 따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북한에 대한 제재 결의의 완전한 이행을 촉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음.
- 일본 정부는 이와 함께 북한이 일본을 사거리에 둔 중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할 가능성도 있을 것으로 보고 정보수집 태세를 한층 강화하면서 발사 징후가 있으면 미사일방어(MD) 시스템에 의한 요격을 검토하고 있다고 일본 언론들이 5일 보도했음.
- 일본 정부는 4일 오전 북한의 미사일 발사 직후 총리실에 관계 성·청 간부들로 구성된 대책실을 설치하고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주변국의 안보를 위협하고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는 도발행위라고 강력히 비난하는 성명을 발표했음.
- 일본은 또한 베이징(北京)의 외교 루트를 통해 북한 측에 엄중히

항의하는 한편 이번 주중에 유엔 안보리에서 의제로 제기해 의장성명 등을 통해 유엔 제재 결의를 엄격히 이행할 것을 각국에 촉구해 나가기로 했음.

- 아소 다로(麻生太郎) 총리는 이날 기자단에게 "확실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며 정보수집 등에 전력을 기울일 것임을 강조하면서 오는 8일부터 이탈리아에서 개최되는 주요 8개국(G8) 정상회의에서도 이 문제를 거론할 것임을 시사했음.
- 방위성은 지난 1일부터 탄도미사일에 대한 대응능력을 강화한 신 방공시스템의 가동을 개시, 감시태세를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음. 방위성은 필요할 때는 지난 4월의 북한의 장거리미사일 발사 때와 마찬가지로 MD의 발동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음.
- 한편, 일본의 한반도문제 전문가인 오코노기 마사오(小此木政夫) 게이오대 교수는 미국이 북한의 도발행위를 계속 무시하면 북한이 역으로 더욱 강경한 수단을 취할 가능성이 있다면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과 3차 핵실험도 단행할 우려가 있다고 내다봤음. 오코노기 교수는 일본 언론의 취재에 북한이 미국의 독립기념일에 미사일을 발사한 것은 미국에 굴복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것이라면서, 그러나 상황에 진전이 없을 때는 억류 중인 미국인 기자 2명을 구실로 대화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고 분석했음.

○ 日, 北 미사일 발사 비난 성명(7/4)

- 일본 정부는 4일 성명을 발표, 이날 오전 북한이 미사일을 동해로 발사한 것은 주변 국가의 안전을 위협하는 도발행위라고 비난했음. 일본 정부는 앞으로 미국과 한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와 긴밀히 연대해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해나갈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음. 가와무라 다케오(河村建夫) 관방장관이 발표한 일본 정부 성명은 "일본을 포함한 주변 각국의 안보에 대한 중대한 도발행위로 유엔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에 위반함. 이를 용인할 수 없으며, 엄중히 항의한다"고 밝혔음.
- 이 성명은 북한에 탄도미사일 계획과 관련한 모든 활동을 중지하도록 하는 유엔 결의를 즉각 철저히 이행할 것을 촉구하면서, 핵 문제와 납치문제 등 제반 현안에 대해 포괄적 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행동을 요구했음.
- 일본 정부는 앞서 북한이 이날 오전 10시경 동해상으로 미사일을 발사한 것과 관련, 총리 관저에 대책실을 설치하고 경계감시를 강화하며 정보 분석을 서둘고 있음.

○ "北 11일까지 동서해 10곳 군사훈련"<日 당국>(7/2)

- 북한이 군사 훈련을 이유로 동해와 서해상의 10개 해역에 항해금지 조치를 내렸다고 마이니치(每日)신문과 교도통신 등 일본 언론이 2일 보도함. 일본 언론들에 따르면 북한 당국은 오는 11일까지 동해상

7개, 서해상 3개 해역에서 군사 훈련을 실시해 이 구역에 항해금지 조치를 내린다는 내용을 일본 해상보안청에 최근 이메일로 통보해옴.

- 북한 측이 일본에 통보해온 10개 해역 가운데 북한 영해가 아닌 곳은 원산 앞바다 동해상의 동서 263㎞, 남북 31㎞에 걸친 해역 한 곳으로, 나머지 9곳은 모두 북한 영해임. 예정된 훈련 시각은 11일까지 오전 8시부터 오후 9시까지라고 해상 보안청은 밝힘.

○ 日, 정밀기기 북한 밀수출 업자 체포(6/30)

- 일본 가나가와(神奈川)현 경찰은 29일 장거리미사일 개발에 필요한 정밀기기인 자기측정장치를 미얀마를 경유해 북한으로 수출하려 한 조총련계 무역업체 사장(41) 등 3명을 외환 및 외국무역법 위반혐의(무허가수출미수)로 체포함. 일본 언론에 따르면 체포된 도코(東興)무역 사장 이경호씨 등 3명은 지난 1월 대량살상무기 등에 전용될 가능성이 있어 수출이 금지된 자기측정장치 1대를 경제산업성의 허가없이 약 700만엔에 말레이시아를 거쳐 미얀마로 수출하려 했다는 것임. 일본 경찰은 미얀마를 북한으로의 우회수출 경유지로 파악하고 있음.
- 이 회사는 지난해 9월에도 이 기기를 미얀마의 '제2공업부'에 수출하려했으나 출하 직전 당국의 수출신청 절차가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라 수출하지 못함. 이 기기를 미얀마로 수출하려 한 것은 북한 조선노동당에서 군수부문을 총괄하고 있는 '제2경제위원회'의 산하에 있는 '동신(東新)국제무역유한공사'(본사 홍콩)의 베이징(北京)사무소가 작년 봄에 내린 지시에 따른 것이라고 일본 언론은 전함. 동신국제무역의 평양 사무소에 대해서는 대량살상무기의 개발에 관여하고 있다는 이유로 일본 경제산업성이 요주의 기업 리스트에 올려놓고 있음.

마. 기타

○ 北어선 2척 NLL월선..北경비정 예인(7/5)

- 북한 어선 2척이 5일 오전 11시께 서해 연평도 서방 26km 해상에서 북방한계선(NLL)을 1.8km가량 월선했다가 4시간여 만에 되돌아갔다고 합참이 밝혔음. 북한 어선 2척에는 각각 선원 3명과 2명이 승선했으며 당시 해상에 낀 짙은 안개로 항로를 이탈해 NLL을 월선한 것으로 합참은 판단하고 있음.
- 북한 어선이 NLL 이남으로 진입하자 해군 고속정이 긴급 출동, 항로 이탈 사실을 확인한 뒤 함정 간 국제상선통신망을 통해 "귀측 어선을 유도 중이니 (NLL 이북에서)대기하라"고 북한 함정에 통보했음. 이에 북한은 아무런 응신을 하지 않은 채 오후 3시12분께 경비정 1척을 NLL 이남으로 내려 보내 어선과 함께 북상했으며 또 다른 경비정 1척은 NLL 이북 해상에서 대기했다고 합참은 설명했음.

- 앞서 지난달 30일에도 북한 어선 한 척이 서해 대청도 해상 인근 NLL을 월선했다가 2시간15분여 만에 북한 경비정에 의해 예인돼 북으로 되돌아갔음.

6일부터 북한통계포털 서비스(7/5)

- 통계청은 북한 관련 통계를 한 곳에 모은 '북한통계포털'을 구축, 6일부터 국가통계포털(KOSIS)을 통해 선보인다고 5일 밝혔음.
- 이 포털은 북한의 주요 통계 13개 부문 96개 연·월간 자료와 국제기구에서 제공하는 53개 연간(부정기 포함) 자료를 담은 것으로 북한 관련 통계를 생산하는 통일부, 국정원 등 76개 국내기관과 유엔, 식량농업기구(FAO) 등 33개 국외 사이트도 연결했음.
- 이 서비스는 국가통계포털 →기획통계 →북한통계포털(오른쪽 배너) 순으로 접속하거나 곧바로 북한통계포털(http://bukhan.kosis.kr)로 접속해 이용할 수 있음.

홍콩언론, 北미사일 발사 집중보도(7/5)

- 홍콩 언론은 5일 북한의 미사일 발사 사실을 비중 있게 보도하면서 한반도 문제에 대해 깊은 관심을 표명했음. 홍콩의 영자지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는 '반항적인 북한, 미사일을 연달아 발사하다'는 제목의 1면 기사를 통해 북한이 전날 동해 상으로 단거리 미사일 7발을 잇달아 발사한 사실을 보도했음.
- 특히 이 신문은 연합뉴스 보도를 인용해 발사된 7발의 미사일 가운데 앞의 3발은 사거리를 줄인 노동미사일이며 나머지는 스커드-C 미사일의 개량형일 가능성이 크다고 전했음. 이 신문은 또 북한의 이번 미사일 발사는 유엔 결의안에 대한 위반행위이자 독립기념일을 하루 앞둔 미국에 대한 명백한 도전의 메시지로 해석된다고 분석했음.
- 이어 이 신문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해 중국과 러시아가 공동성명을 통해 관련국들의 자제와 함께 북한의 6자회담 복귀를 촉구했으며, 미국은 "긴장을 야기시키는 행위를 삼가야 한다"고 비판했다고 전했음.
- 이와 함께 명보(明報)도 "북한 미국 국경일을 '축하'하기 위해 7발의 미사일 발사"라는 제목의 국제면 머리기사를 통해 북한의 미사일 발사 사실을 상세하게 보도했음.
- 특히 이 신문은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사진과 함께 북한이 보유하고 있는 각종 미사일의 사거리, 북한의 미사일 발사 일지 등을 소상하게 전했음.
- 문회보(文匯報)도 국제면 톱기사를 통해 북한이 미국 독립기념일을 하루 앞두고 7발의 미사일을 발사해 한반도의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다고 보도했음. 이밖에 봉황TV(피닉스TV), TVB 등 홍콩의 텔레비전들도 북한의 미사일 발사소식을 주요뉴스로 다뤘음.

○ 日, 신형 요격미사일 도입 검토(7/5)

- 일본 방위성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공격에 대비, 현재 보유하고 있는 해상발사형 요격미사일(SM3)과 지상발사형 요격미사일(PAC3)을 보완하게 될 신형 요격미사일의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고 마이니치(每日)신문이 5일 보도했음. 신형 요격미사일은 '고고도(高高度)광역방위시스템(THAAD)'으로 불리는 것으로, 방어범위가 PAC3에 비해 10배 정도 넓다고 신문은 전했음.
- 방위성은 신형 미사일을 SM3와 PAC3를 보완하는 '제3의 미사일'로 자리 매김하고 올 연말 책정되는 방위계획 대강에 반영시키도록 할 방침임. 방위계획 대강은 일본 방위정책의 기본 방향을 정하는 것으로 내년부터 2014년까지 5년간 적용됨.
- 일본이 구축한 현재의 미사일 방어(MD) 시스템은 2단계로 구성돼 있음. 날아오는 미사일을 우선 해상자위대의 SM3가 고도 100km 이상의 대기권 밖에서 요격하며, 이를 놓치면 지상 15-20km에 도달한 시점에서 항공자위대의 PAC3가 요격에 나서게 됨.
- 그러나 PAC3는 사거리가 20km 정도로 짧고 지상의 수비범위도 반경 20km에 불과하기 때문에 발사정보를 사전에 입수, 필요한 장소로 이동할 필요가 있어 일본 전국을 커버하기에는 현실적으로 곤란한 실정임.
- 이에 비해 신형 요격미사일은 사정이 100km를 넘기 때문에 지상방어 범위가 PAC3의 10배 정도에 달해 국내에 3-4기만 배치해도 거의 전국을 방어할 수 있다고 신문은 지적했음. PAC3는 11개소에 배치하는데 5천억엔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알려졌음. THAAD의 도입비에 대해서는 방위성이 밝히지 않고 있지만 PAC3에 비해 적은 예산으로 일본 전역을 방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

○ "北 권력승계 급하게 안할 것"<러 전문가>(7/3)

- 러시아의 한반도문제 전문가인 알렉산드르 보론초프 러시아과학아카데미 동방학연구소 한국·몽골학 과장은 북한의 권력승계가 일부에서 예상하는 것만큼 급격하게 진행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힘. 보론초프 과장은 2일 미국 뉴욕의 코리아소사이어티에서 열린 강연에서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건강)이 그렇게 나쁜 상태도 아니고 권력을 승계하기에 충분한 시간도 갖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함.
- 그는 김 위원장이 지난해 아팠던 이후 회복한 것으로 보이고 "완전히 리더십에 복귀한 것으로 생각된다"면서 김 위원장이 군과 산업시설 등을 시찰하며 활발하게 출장을 다니고 있는 점을 그 근거로 제시함. 그는 북한에서 권력 승계는 물론 중요한 문제이지만 핵실험 등 최근 북한의 행동에 대한 주요 원인으로 승계 문제가 자주 거론되는 것은 과장된 면이 있다고 지적함. 그는 또 북한이 중동 문제에 쏠려 있는 미국 버락 오바마 대통령 정부의 관심을 끌어 모으기 위해 핵실험 등을 하고 있다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북한 핵실

험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자신들의 능력을 과시하고 궁극적으로는 핵보유국이 되려는 것이라고 분석함.

- 보론초프 과장은 지난 5월 북한이 2차 핵실험을 했을 때 자신이 마침 평양에 머물고 있었다면서 세계가 북한의 핵실험으로 시끄러웠지만 "정작 북한 내에서는 아무런 변화도 없었다"며 "북한은 너무나 조용했고 주민들도 평소와 같이 일상생활을 지속했었다"고 말함. 그는 이어 북한을 제외한 5자 회담과 관련 "북한이 자신들이 참여하지 않은 상태에서 나오는 제안에 대해 얼마나 긍정적으로 반응할지는 미지수"라고 말함.

"개성공단, 北체제안정에 굉장한 악영향"(6/30)

- 북한은 내부에 개혁추진 세력이 부재하고 그나마 있던 개혁동력도 많이 저하됐기 때문에 북한의 개혁개방을 촉진하기 위해선 외부로부터 무역통상과 경제협력이 긴요하다고 중국의 챠오 위즈 베이징대 교수가 주장함. 베이징대 조선문화연구소 조선경제연구실 주임인 챠오 교수는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이 30일 서울 신라호텔에서 '북한의 장래와 국제사회의 대북정책 과제'라는 주제로 개최한 세미나에서 북한 핵심 권력층의 고령화와 과거 개혁세력의 숙청 등을 들어 북한 내부의 개혁동력 고갈을 설명함.
- 그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포함해 국방위원회 위원과 중앙당 비서 등 핵심 권력층 총 24명가운데 70세 이하는 최근 리광호 당과학교육부장이 사망함에 따라 단 3명으로 줄어들었다고 지적함. 그는 또 지난 90년대 나진선봉 특구를 추진하던 김달현 당시 정무원 부총리가 숙청됐고, 2002년 7.1 경제개혁 조치를 추진하던 세대도 다 숙청됨으로써 "북한에서는 의식이 트인 세대가 개혁을 추진하려고 해도 다들 보고만 있을 뿐 움직이려는 동력을 상실했다"고 강조함.
- 1988년 이후 베이징에서 소수의 이공계생 외에는 북한 유학생을 보기 힘들다고 말한 그는 "체계화된 북한식 개혁이론을 창출할 세대가 있다 해도 그런 인재들이 감히 지금의 체제 아래서 그런 제안을 김정일 위원장에 할 용기가 있겠느냐"고 반문함. 따라서 북한의 개혁개방을 촉진하기 위해선 외부 세계가 북한의 중앙정부를 상대로 무역을 신장시켜 북한내 시장의 기능을 높여야 하고, 지방 차원에선 개성관광과 개성공단처럼 북한 주민의 고용을 개혁개방 수단으로 삼을 수 있다고 챠오 교수는 주장함.
- 한국어를 능숙하게 구사하는 그는 "개성관광과 개성공단은 북한의 체제안정에 굉장히 악영향을 미쳤다"며 "북한 주민들은 저마다 개성공단에서 일하기 위해 '빽'을 쓰고 있는데 그만큼 좋은 직장이 없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개성공단에 대한 얘기가 개성 뿐 아니라 그 주변에도 많이 확산됐다"고 덧붙임. 그는 특히 "개성공단 근로자를 통해 북한 주민들에게 제공되는 남한의 초코파이가 대단한 인기를 끄는 이른바 '초코파이 사태'도 북한 주민들에겐 새로운 외부 정보

를 접한다는 의미를 지닌다"며 이것은 "단순한 경제적 의미보다 북한을 개혁개방으로 이끄는 데 더 중요한 의미가 있을 수 있다"고 강조함.

- 이어 그는 "한국의 대북 경제정책과 경제협력은 너무 정치적 색채가 강하다"며 "한국만큼 북한에 관한 지식을 축적한 곳이 없는 데 비해 중국은 북한과 인적 교류와 비즈니스를 편하게 할 수 있는 나라이므로 한국 기업이 중국 기업과 협력해 대북 사업에 진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언함.
- 중국공산당의 조호길 중앙당교 교수는 "북한은 중국의 개혁개방 사례에서 보듯 기본적으로 국가 안전보장이 이뤄지지 않으면 개혁 개방을 하기 어렵다"며 "이명박 정부의 '비핵·개방·3,000' 정책은 핵을 포기하지 못하는 김정일에게 비핵을 전제로 '내 말만 들어라'는 식이어서 실행되기 힘들다"고 말함. 그는 북한의 제2차 핵실험으로 인한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와 관련, "중국이 북한에 대해 단순히 말로만 권유하던 시대는 끝났고 이제는 권유와 압박을 동시에 할 것"이라고 전망함.
- 그러나 잭 프리처드 한미경제연구소장은 중국의 대북 제재 참여 정도에 대한 연합뉴스 기자의 질문에 "최소한의 수준"이 될 것이라며 미국이 대북 제재를 주도하고 그 근거가 될 정확하고 분명한 정보를 제공했을 때에만 중국이 움직일 것이라고 예상함. 스콧 스나이더 아시아재단 선임연구위원도 "일각에서는 제재를 북한에 대한 징벌로 보는데 중국은 제재를 북한과의 협상을 촉진할 수 있는 도구로 본다"며 "아직 중국의 제재 참여 여부를 말하기는 시기상조"라고 말함.

"미얀마, 영해서 北강남호 검색 통보"<RFA>(6/30)

- 미얀마 정부는 미국 해군함의 추적을 받고 있는 북한 화물선 '강남호'가 유엔이 금지한 물자를 선적했을 경우 입항을 불허하겠다는 입장을 북한측에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미국의 자유아시아방송(RFA)이 30일 전함. 이 방송은 익명을 요구한 미얀마 외교부의 관리의 말을 인용, 미얀마 외교부의 교육·연구·외국어 담당국장인 포 르윈 세인 대사가 지난주 미얀마 주재 김석철 북한대사를 불러 "미얀마 당국이 직접 미얀마 영해상에서 강남호를 수색하겠다"며 이같이 통보했다고 보도함. 세인 대사는 또 "꼭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만 한해" 미얀마 주재 다른 외교공관의 협조를 받아 수색하겠다고 김석철 대사에게 말했다고 방송은 덧붙임.

2. 주변국 관련

가. 한·미 관계

○ **<한·미원자력협정 개정 현안 부각되나>(7/2)**

- 정치권을 중심으로 회자되던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 문제가 현안으로 부각될 조짐임.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은 2일 정례브리핑에서 "매우 조심스러운 내용"이라면서도 "조속한 시일내에 한국과 미국간에 원자력협정을 개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함. 그는 그러면서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을 위한 한·미간 협력을 좀더 구체적으로 정하고 기후변화에 대처하기 위해 원자력 의존도를 높여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원자력) 원료의 공급이나 쓰고 남은 원료의 처리문제에 있어 상업적 이익은 최대로 할 수 있는 방향으로 구체적인 협의를 해나가야 할 것"이라고 설명함.
- 요약하자면 이른바 핵주권문제와 관련해 '평화적 이용'을 기본 원칙으로 하면서 경제적 이익을 도모해나가는 방향으로 한·미간 원자력협정을 개정해 나가자는 취지임. 핵무기 보유를 의미하는 군사적 핵주권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음을 분명히하면서 현실적인 이익을 추구하자는 것으로 해석됨. 한국은 현재 20기의 원자력발전소를 가동하고 있는 세계 5위권의 원자력 강국이지만 그 위상에 비해 핵이용 권리는 제한돼 있다는 점에서 그동안 논란이 돼옴.
- 한국은 1974년 미국과 체결한 원자력협정에 따라 핵연료 재처리를 안 해왔음. 특히 1991년 11월 노태우 대통령이 한반도 비핵화 선언을 통해 평화적 핵산업에 없어서는 안 될 농축과 재처리시설을 갖지 않겠다고 선언한 이후 핵폐기물 처리는 하지 않고 있음. '우라늄 채광→농축→핵연료 제조→사용→사용 후 연료 재처리'라는 일련의 핵주기가 완성되지 못한 것임. 사용 후 연료를 재처리하면 원자력발전용 연료로 쓰이는 농축우라늄이 됨. 일본은 현재 핵폐기물 재처리시설을 보유하고 있음.
- 한국은 농축우라늄을 미국 등에서 수입하고 있음. 게다가 한·미 원자력협정으로 인해 재처리를 못하게 되면서 원자력발전 뒤에 생기는 사용 후 연료를 계속 쌓아만 놓았음. 그 결과 2016년이면 사용후 연료의 저장능력이 포화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한국원자력연구원에 따르면 연간 우라늄 사용량은 4천t이며 20기의 원자력발전소에서 매년 700t 정도의 사용 후 연료가 발생함.
- 결국 한국이 재처리를 할 수 있다면 사용 후 핵연료 중의 95%가량을 에너지원으로 재활용할 수 있으며 폐기물이 5% 정도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경제적으로도 환경적으로도 이득이라는게 '협정개정론자'들의 주장임. 한·미 원자력협정은 2014년까지 개정해야 함. 한·미는 올해 하반기 개정협의를 시작해 2012년까지 진행할 것으로 알려짐. 유 장관의 발언을 중심으로 보면 정부는 향후 개정협의 과정

에서 핵연료 재처리 금지를 완화하는 쪽으로 입장을 정리할 가능성이 커 보임.

- 하지만 이같은 이른바 '평화적 핵주권'을 획득하는 문제에 있어서도 많은 난관이 기다리고 있음. 무엇보다도 핵연료 재처리에 대해 국제사회로부터 투명성을 인정받아야 함.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하려는 야욕을 숨기지 않는 상황에서 자칫 한국도 '핵무장을 하려는게 아니냐'는 의심을 받을수 있는 상황임. 또 국내적으로도 야당 등이 협정 개정에 부정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것도 변수가 될 전망임.
- 특히 한국이 원자력협정 개정을 요구했을 때 미국이 어떤 입장을 보일 지도 불투명함. 소식통들에 따르면 미국은 현재 협정 개정에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따라서 국내외적인 변수를 두루 감안해 정부는 조만간 이 문제에 대한 입장을 정리하고 향후 미국과의 협의에 대비할 것으로 예상됨.

○ "美, 한국 핵재처리 허용은 부적절"(7/1)

- 엘런 타우처 미국 국무부 비확산·군축담당 차관은 버락 오바마 행정부가 한국에 핵연료 재처리를 허용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입장을 보임. 지난주 상원 인준을 통과한 타우처 차관은 인준에 앞서 상원 외교위원회 리처드 루거(공화.인디애나) 의원에게 보낸 서면답변을 통해 "한국 내 재처리공장이 들어서는 것은 1992년 한반도 비핵화공동선언 위반이라고 믿는다"며 이같이 밝힘.
- 타우처 차관은 또 '한국이나 대만이 미국산 핵연료를 재처리할 수 있도록 버락 오바마 행정부가 현재의 핵협력 협정을 개정할 의사가 있느냐'는 질문에 필요하다고 믿지 않는다고 답함. 그는 "미국은 유럽연합, 인도, 일본에 대해서는 이들 국가 내에서 핵연료를 재처리하도록 동의했다"면서 "오바마 행정부는 이런 재처리 동의가 한국이나 대만을 포함한 다른 지역에 반드시 적용돼야 한다고 믿지 않는다"고 말함.
- 북한의 2차 핵실험 실시 후 한국 내 일각에서는 북한에 맞서기 위해 92년 비핵화공동선언의 폐기를 선언한 뒤 우라늄 농축과 사용후 핵연료의 재처리 능력을 갖춰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함.

나. 한·일 관계

○ 한·일 해군, 동해서 수색·구조훈련 실시(6/30)

- 한국 해군과 일본 해상자위대가 다음 달 6~7일 독도 동남방 해상에서 '한·일 수색 및 구조훈련'(SAREX)을 실시한다고 국방부가 30일 밝힘. 해상에서 조난선박 발생시 양국 해군 간 공동대처능력을 배양하고 공조체계를 구축하는 동시에 군사교류 및 우호관계 증진을 위해 실시하는 이번 훈련은 평화와 인도주의적 차원의 훈련으로, 1999년 첫 실시된 이후 이번이 6번째임.

- 한국 해군은 KDX-Ⅱ 왕건함(4천300t급) 등 구축함 2척, 초계기(P-3C) 1대, 대잠헬기(LYNX) 1대를, 일본 해상자위대는 오오나미함(4천600t급) 등 구축함 2척과 소해함(MSC) 1척, 초계기와 초계헬기(SH-60J), 수상항공기(US-2) 각 1대를 참가시킴. 한국 해군 훈련전대는 다음달 2일 진해를 출항, 3일 일본 마이즈루항에 입항해 일본 훈련분대와 함께 환영행사, 사전회의, 친선행사를 실시한 후 6일 출항해 7일까지 이틀간 훈련을 실시할 예정임.
- 한·일 해군은 훈련을 마친 뒤 8일 동해항에 함께 입항할 예정임. 일본 함정이 동해항에 입항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임. 이번 훈련에는 지난달 29일 임관한 초급장교 187명이 함정에 동승해 함정기본훈련을 실습하고 일본의 주요 전사적지 및 산업시설 등을 견학할 계획임.

다. 미·일 관계

○ "日 외무성, 美 핵반입 문서 인수인계"(6/29)

- 1960년 미국과 일본이 안전보장조약을 개정하면서 핵무기 탑재 함선의 일본 기항 등을 일본측이 인정했다는 '밀약'과 관련, 1987년 7월에 외무성 사무차관에 취임한 무라타 료헤이(村田良平·79)씨가 전임 차관으로부터 이를 문서로 인수 인계받았다고 마이니치(每日) 신문이 29일 보도함. 신문에 따르면 무라타씨는 마이니치와의 인터뷰에서 "밀약이 있는 것 같다는 이야기는 들었지만, 일본측이 갖고 있는 문서를 본 것은 사무차관이 됐을 때가 처음이다"라고 말함.
- 일본 정부는 이 문서의 존재를 부정하고 있으며, 역대 외무차관들 사이에서 이것이 인수인계됐다는 증언이 나온 것은 처음임. 무라타씨에 따르면 문서는 '외무성에서 사용되는 보통 사무용지' 1장에 쓰여졌으며, 봉투에 들어 있었음. 그는 전임자로부터 "이 내용은 외상에게 설명해라"라는 말과 함께 문서를 받았다고 말했음. 그도 사무차관을 그만두면서 후임 차관에게 이를 전달함.
- 1960년 안보조약 개정 당시 양국 정부는 주일미군 기지 운용과 관련, 미군이 핵탄두 반입을 포함한 중요한 장비의 변경이 있을 경우엔 사전에 협의한다는 점을 합의했지만, 핵무기를 탑재한 미국 함선의 일본 기항이나 영해 통과 등은 사전 협의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밀약을 한 것으로 알려져 옴. 그러나 일본 정부측은 과거 회의 자료 등에서 이러한 사실이 속속 드러나고 있음에도 "그런 밀약은 없다"라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음.

라. 미·러 관계

○ 오바마 "푸틴, 냉전적 접근은 안돼"(7/3)

-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2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총리에 대해 "미-러 양국이 핵무기를 감축하려는 이때에 과거 냉전적 방식으

로 양국관계에 접근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말함. 오바마 대통령은 내주 러시아, 이탈리아, 가나 등 해외 순방을 앞두고 이날 백악관에서 AP통신과 가진 기자회견에서 푸틴 총리를 "여전히 한 발은 과거의 문제해결 방식에 두고 다른 한 발은 새로운 방식에 두고 있다"며 이같이 밝힘.

- 오바마 대통령은 러시아 방문 중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대통령뿐만 아니라 푸틴 총리와도 회담을 가질 예정임. 오바마 대통령은 "푸틴 총리가 여전히 많은 권한을 행사하고 있다"면서 "우리가 메드베데프 대통령과 함께 앞으로 나아간다 해도 푸틴 총리가 오래된 냉전방식의 미-러 관계 접근이 시대에 뒤떨어진 것이며, 지금은 다른 방향으로 움직여 나가야 할 때라는 점을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함.
- 그는 또 "우리는 푸틴 총리와 러시아 국민에게 미국은 적대적 관계를 추구하지 않고 핵비확산, 테러와의 싸움, 에너지 문제 등에 협력하는 과정을 통해 더 강력한 동반자가 되길 원한다는 분명한 인상을 줄 수 있다"고 덧붙임. 오바마 대통령은 메드베데프 러시아 대통령과는 매우 훌륭한 관계를 형성하고 있으며 핵군축에서 성과를 기대한다고 말함. 미국과 러시아 두 정상은 이번 만남을 통해 장거리 핵미사일 감축을 위한 새로운 협정에 대해서도 논의할 계획임.
- 오바마 대통령은 러시아가 북한과 이란의 핵 개발프로그램을 포기하도록 설득하는 과정에서 보여준 협력을 높게 평가하면서 유엔이 최근에 우리가 본 것들 가운데 북한에 가장 강력한 제재를 승인했다고 말함. 그는 이란의 핵무기 보유에 대해 "나 뿐만 아니라 국제사회도 동조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이란의 핵무장은 혼란스러운 중동에서 군비경쟁을 가속화시켜 잠재적인 재앙을 가져올 수 있다고 지적함.
- 아프가니스탄 문제에 대해 오바마 대통령은 오는 8월 총선이 끝난 뒤 미군의 추가파병이 필요한지를 평가할 것이라고 말함. 오바마 대통령은 미국의 경제상황에 대해 일부 진전이 있긴 하지만 많은 일자리가 여전히 사라지고 있다며 우려를 표명함. 그는 이날 미국 실업률이 지난 26년간 최고치인 9.5%에 이른 것과 관련, "경각심을 주는 뉴스가 나온 날"이라고 말함. 그는 또 "내가 백악관의 이 문을 들어설 때 말했던 것처럼 우리가 이런 혼란이 겪게 되기까지 수년이 걸렸고 이를 반전시키는 데는 몇 개월이 더 필요할 것"이라며 경기 회복에 대한 섣부른 낙관을 경계함.

마. 중·일 관계

○ 日,中과 분쟁열도 인근섬에 군대배치검토(7/2)

- 일본 방위성은 일본과 중국, 대만이 서로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는 일단의 섬에서 가까운 동중국해의 한 섬에 군대를 배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방위성 대변인이 2일 밝힘. 이 대변인은 요나구니섬

에 군부대를 보내는 계획에 관한 도쿄신문의 보도를 확인하면서 "연말로 예정된 기본방위계획 개정에 포함되도록 배치를 검토중"이라고 말함. 요나구니는 대만에서 동쪽으로 120㎞ 떨어진 작은 섬으로 일본어로 센카쿠(尖閣)열도, 중국어로 댜오위다오(釣魚島)로 불리는 무인도에서 남쪽으로 170㎞ 떨어진 곳에 위치해 있음.

- 방위성 대변인은 일본 규슈(九州) 남단과 대만 사이에 있는 열도에 군사를 배치하는 것은 "일본의 방위배치에 중요한 요소"라고 말함. 도쿄신문은 이번 이동이 냉전시대 북방 국경에 치중했던 방위의 초점을 남서부 국경으로 옮기려는 일본의 방위정책변경의 일부라고 설명함. 방위성에 따르면 일본의 현재 최남단 병력배치지는 요나구니에서 북동쪽으로 500㎞ 떨어진 오키나와(沖繩) 본섬의 나하(那覇)에 있음.

바. 기타

○ <日, IAEA 사무총장 선출 크게 반겨>(7/3)

- 일본의 언론과 정치권은 3일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총장에 자국의 IAEA 대사인 아마노 유키야가 선출된 것을 크게 환영함. 2차 세계대전 당시인 1945년 원자탄이 떨어졌던 히로시마의 시장은 아마노가 IAEA 사무총장에 선출됐다는 보도에 곧바로 축하 메시지를 내놓음. IAEA는 오스트리아 빈에서 열린 35개 회원국 총회에서 62세인 아마노를 사무총장에 선출함. 일본이 IAEA 사무총장을 배출한 것은 이번이 처음임. 아마노는 미국에 의해 원자폭탄이 투하됐던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의 비극을 되풀이 하지 않기 위해 그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하겠다는 결의를 밝힘.

○ 한-EU 경쟁협력협정 1일 발효(7/2)

- 한국이 전 세계적으로 경쟁법(공정거래법) 집행을 주도하는 유럽연합(EU)과 체결한 '한-EU 경쟁협력협정'이 1일 발효됨. 2일 주(駐)벨기에·유럽연합 대사관(대사 박준우)에 따르면 지난 5월 말 서울에서 개최된 한-EU 정상회담 당시 최종서명이 이뤄진 경쟁협력협정이 7월1일 자로 발효됨.
- 한-EU 경쟁협력협정은 한국이 경쟁정책 분야에서 외국과 체결한 최초의 협정이며, EU측에서는 미국(1991년), 캐나다(1999년), 일본(2003년)에 이어 4번째로 체결한 협정임. 전 세계적으로 기업활동과 관련해 경쟁정책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는 가운데서도 이처럼 협력협정 체결이 드문 것은 반(反) 경쟁행위에 대한 조사 협력, 상대방에 대한 법집행 요청이 골자여서 상호 신뢰가 없이는 협정 체결이 어렵기 때문임.
- 한-EU 경쟁협력협정이 발효됨으로써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내 소비자에게 해를 끼치는 외국기업의 국제 카르텔을 더 효과적으로 적발,

제재할 수 있게 됨. 그러나 다른 한 편으로는 국제적인 경쟁법 집행이 강화되기 때문에 국내 기업 입장에서는 그만큼 경쟁에 반하는 위법행위를 하지 않도록 더욱 주의해야 함.

- 대사관의 김재신 경쟁관은 "전 세계적 '경쟁정책 파수꾼' 역할을 톡톡히 하는 EU와 경쟁협력협정을 체결, 발효시킴으로써 한국 경쟁당국의 법집행 역량을 인정받고 다른 분야에서도 EU와의 협력을 공고히 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설명함.

○ <中, 마잉주 중남미 순방 '못마땅'>(7/1)

- 중국이 마잉주(馬英九) 대만 총통의 미국을 경유한 중남미 순방에 내심 불쾌감을 드러내고 있음. 중국 언론들은 마 총통이 미국에 머물면서 전화 외교로 '무기 수입을 추진했다'며 공격하는가 하면 중국 정부도 그의 해외 순방과 관련, "하나의 중국의 원칙에 따라 대만 문제를 처리해야 한다"는 원칙적인 입장을 강조하면서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있음을 우회적으로 표명함.
- 중국과 대만은 최근 전면적인 협력이 강화되고 있지만 중국 입장에서는 하나의 중국 속에 포함된 대만이 직접 나서 외교활동을 하는 것은 인정할 수 없기 때문임. 공산당 기관지인 인민일보 자매지 환구시보(環球時報)는 30일 대만 지도자인 마잉주가 샌프란시스코에서 콘돌리자 라이스 전 미국 국무장관과 전화통화를 갖고 임기내에 대만에 무기를 수출해 준 것에 대해 감사를 표시하고 지난해 미국을 경유할 수 있도록 도와준 데 대해서도 고마움을 전했다고 보도함.
- 환구시보는 마잉주가 6명의 미국 상원 의원과 전화통화를 갖고 미국의 대(對)대만 무기 수출 문제와 비자 면제 문제, 범죄인 인도조약 체결 등에 대해 논의했다고 보도해 마 총통이 독자적인 외교활동을 통해 무기 수입을 추진하고 있는 데 대해 곱지 않은 시선을 드러냄. 마 총통은 이번 미국 방문에서 미국 대만협회 명예주석과 마이크 혼다 미국 하원 의원 등과도 만나 현안을 논의하고 300여명의 대만 화교들이 모인 만찬에도 참석함. 마 총통은 30일 전용기편으로 다음 방문지인 중남미의 파나마로 이동함.
- 이와 관련, 친강(秦剛)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30일 정례브리핑에서 "하나의 중국 원칙은 중국과 세계 다른 국가간 관계 발전의 기초이자 국제사회가 보편적으로 인정하는 원칙"이라면서 "중국 정부는 일관되게 하나의 중국이란 기초위에서 대만과 관련된 문제를 처리하고 있다"고 말함.

○ "中, 석유비축량 2.6배로 증대"(6/29)

- 중국 정부가 전략 석유 비축량을 5년 후 현재의 2.6배인 2억7천만 배럴로 늘릴 계획이라고 니혼게이자이(日本經濟)신문이 중국 정부 관계자의 발언을 인용해 29일 보도함. 신문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저장(浙江)성 등에 있는 제1기 비축기지의 석유 저장이 거의 완료된 만큼 연내에 제2기 비축기지 건설에 착수할 계획임. 투자액은 300억위안(약 5조6천억원) 규모임.

- 세계 2위의 석유 소비국인 중국의 비축 동향은 세계 석유시장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고 신문은 전망함. 중국이 조만간 건설에 착수할 제2기 비축기지는 8개소로 구성되고, 합계 비축량은 1억6천900만 배럴 규모임. 중국 정부 관계자는 "5, 6년 내에는 대부분의 기지를 완성시키고 순차적으로 석유 저장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고 신문은 덧붙임.

[참고 1] 〈표〉 李대통령 유럽3개국 방문 일정 (연합뉴스, 7/1)

일정	방문국	주요일정
7.7		- 출국
7.7~8	폴란드	- 한-폴란드 정상회담 - 폴란드 총리 면담 - 한-폴란드 비즈니스 포럼 연설 - 세계인류 한국상품전 시찰 - 동포간담회 등
7.9~10	이탈리아	- 기후변화 주요국 회의(MEF) 참석 - 무역관련 정상회의 참석 - 식량 안보회의 참석 - 이탈리아 대통령 주최 만찬 참석 등
7.11~13	스페인	- 스웨덴 - 한-스웨덴 정상회담 - 스웨덴 의회 의장 면담 - 한-스웨덴 CEO 간담회 - 구스타프 스웨덴 국왕내외 오찬 - 친환경도시(하마비) 방문 - 스웨덴 유공인사 만찬 간담회 - 동포간담회 등
7.14		- 귀국

[참고 2] 〈그래픽〉 북 미사일 낙하 위치 (연합뉴스, 7/5)

- (서울=연합뉴스) 장성구 기자 = 북한이 4일 발사한 7발의 미사일 가운데 5발가량이 발사대로부터 420여km의 같은 지점에 낙하, 명중률이 향상된 것으로 분석됐음.
- 정부의 한 소식통은 5일 "북한이 전날 발사한 7발의 미사일 중 5발가량이 동해 항해금지구역내 같은 지점에 떨어진 것으로 파악됐다"면서 "그만큼 목표물에 대한 명중률이 높아진 것으로 분석된다"고 밝혔음.

박영석 기자 zeroground@yna.co.kr / 20090705

sunggu@yna.co.kr

출처:
http://app.yonhapnews.co.kr/YNA/Basic/Article/ArticleGraphic/YIBW_showArticleGraphicPopup.aspx?contents_id=GYH20090705000500044

[참고 3] 〈북한 미사일 발사 일지〉 (연합뉴스, 7/5)

- (서울=연합뉴스) 김귀근 기자 = 북한이 4일 스커드 미사일과 노동미사일 등 7발을 잇따라 발사함에 따라 올들어 쏜 미사일은 모두 17발로 늘어났음. 앞서 4월5일에는 장거리 로켓 1발을 발사했음.

다음은 2003년 이후 발사된 장거리 로켓과 미사일 일지.

▲2003. 2 = 동해안에서 동해상으로 지대함 단거리미사일 발사
▲2003. 3 = 동해안에서 동해상으로 지대함 단거리미사일 발사
▲2003. 4 = 서해상에서 육지로 단거리 미사일 발사
▲2003.10 = 동해안에서 동해상으로 지대함 미사일 발사
▲2005. 5 = 北, 동해상에 단거리 미사일 SS21 개량형인 KN-02 발사
▲2006. 3 = 北, 동해상으로 단거리 미사일 2기 발사(소련제 단거리 미사일 SS21의 개량형인 KN-02과 유사형)
▲2006. 7. 5 = 대포동 2호 1기를 비롯 노동 및 스커드급 등 총 7발 발사
▲2007. 5.25 = 동해상으로 단거리미사일 1발 발사.
▲2007. 6. 7 = 서해상으로 단거리미사일 2발 발사.
▲2007. 6.19 = 동해상으로 단거리미사일 1발 발사.
▲2007. 6.27 = 동해상으로 KN-02 단거리미사일 3발 발사.
▲2008. 3.28 = 서해상에서 함대함 단거리미사일 수발 발사.
▲2008. 5.31 = 서해상에서 함대함 단거리미사일 3발 발사.
▲2008.10. 8 = 서해상에서 단거리미사일 2발 발사.
▲2009. 4. 5 = 北, 오전 11시30분 15초 장거리 로켓 1발 발사
▲2009. 5.25 = 함경북도 무수단리, 지대함 단거리 2발 발사
▲2009. 5.26 = 함경남도 신상리, 지대함 단거리 3발 발사
▲2009. 5.29 = 함경북도 무수단리, 신형 지대공미사일 1발 발사
▲2009. 7. 2 = 함경남도 신상리, 지대함 단거리 4발 발사
▲2009. 7. 4 = 강원도 안변군 깃대령, 단거리 7발 발사(스커드 5발·노동 2발 추정)

threek@yna.co.kr

출처:
http://www.yonhapnews.co.kr/politics/2009/07/05/0511000000AKR20090705049600043.HTML

[참고 4] 〈그래픽〉 北강남호 서해 공해상에서 북상중 (연합뉴스, 7/5)

- (서울=연합뉴스) 장성구 기자 = 미얀마로 추정되는 목적지로 항해하다가 갑자기 항로를 변경한 북한 선박 강남1호가 5일 현재 서해 공해상에서 북상 중인 것으로 알려졌음.

sunggu@yna.co.kr

출처:

http://app.yonhapnews.co.kr/YNA/Basic/Article/ArticleGraphic/YIBW_showArticleGraphicPopup.aspx?contents_id=GYH20090705000600044

국제관계연구센터 제공